



2021
연차보고서

2022.1

『2021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된 2021년은 코로나 위기의 불확실성과 구조화된 저수익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도전에 응전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내부의 연구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자문위원회, 산학연구센터, 각종 세미나와 포럼, 여러 보험·금융학자 또는 전문기관과의 위탁 또는 공동연구 방식으로 다양한 보험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서도 비대면 환경에 걸맞은 화상회의나 유튜브 방송 등 E-컨퍼런스 형태의 온라인 세미나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프라인 위주로 개최되어 온 각종 국내·외 세미나와 산학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포럼 등의 개최 횟수는 늘어나고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교환의 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CEO Brief, CEO Report 발간을 정례화하여 보험산업 내 주요 의사결정자와 산업 현안을 소통하는 기회를 늘리고, 지속적인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보험산업 현안에 대한 시장 일반의 이해를 넓히는 가운데 일반인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보험연구원의 2021년 연구활동 및 대외활동을 모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험연구원이 시장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보험연구원장

이철정



CONTENTS

I 2021년 연구 활동

Chapter 01

사업 재조정

- 4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영국 Legal & General과 Aviva 보험그룹 사례
- 5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일본 사례
- 6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 7 중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Chapter 02

위기대응력 강화

- 10 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 11 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 12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 13 보험회사 ESG 경영 현황 및 과제: 독일 알리안츠 사례 연구
- 14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리스크: 은행과 보험산업 중심으로
- 15 코로나19 충격과 세계경제
- 16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Chapter 03

위험선별·인수능력 강화

- 20 재보험산업 발전 정책방향
- 21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 22 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
- 23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 24 한·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및 보험회사 진출 사례
- 25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배경 및 동향

Chapter 04

판매채널 선진화

- 28 디지털 전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연구
- 29 일본 보험대리점 규제체계

Chapter 05

공·사 협력모형

- 32 건강보장체계에 대한 연구
- 33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연구
- 34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
- 35 보험회사 장기대체투자 현황과 과제
- 36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역할과 과제

Chapter 06

소비자 신뢰 제고

- 38 2020/202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MZ세대의 은퇴저축
- 39 디지털 보험시대, 보험소비자 경험 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
- 40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 4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 42 해외 주요국의 대안적 보험분쟁해결제도
- 43 보험업 영업행위 규제체계 연구
- 44 온라인 보험 서비스 관련 모집 기준 제안
- 45 보험소비자 권리와 사후적 규제체계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으로
- 46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Chapter 07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48 국가보조금 건전성 제고 방안
- 49 아시아 보증보험시장 발전방안 연구
- 50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연구
- 51 민간발주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52 소방맞춤형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
- 53 금융민원 처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

Chapter 08

금융·보험 이슈 연구

CEO Report | CEO Brief

- 56 보험산업 재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 56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 입법경과 및 향후 과제

CONTENTS

- 56 외화보험 현황과 과제
- 57 보험산업 수익성과 대응방안: 내재가치를 중심으로
- 57 보험업 경쟁도 평가
- 57 보험산업 대토론회: 패널토론 요약
- 58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58 퇴직연금 자산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의 영향
- 58 변액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 59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 필요성
- 59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 59 GA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적 쟁점
- 60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60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 60 Next Insurance (I):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 61 Next Insurance (II):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
- 61 Next Insurance (III): 보험산업과 ESG
- 61 Next Insurance (IV): 위험의 진화와 보험의 역할
- 62 플랫폼 규제 현황과 과제: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62 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62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
- 6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 63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
- 63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규제 방향
- 64 미 연준의 통화정책방향
- 64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와 제도 개선 방향
- 64 공·사 건강보험 역할에 대한 논의

KIRI 리포트

- 65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채널의 구성 변화
- 65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
- 65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개선방안
- 66 해외 외화보험시장 성장 및 정책대응과 국내 시사점
- 66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

- 66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추이와 시사점: 코로나19의 잠재위험 요인
- 67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
- 67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 67 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 경제성장
- 68 세계은행의 팬데믹 채권 실패 사례와 시사점
- 68 코로나19 확산과 주요국 주택가격
- 68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과 보험회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 69 코로나19 충격과 재정위기 데자부
- 69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와 고려사항
- 69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 과제
- 70 공·사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사례와 시사점
- 70 영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전후 보험료 변화
- 70 오픈API 기반의 금융생태계 변화와 시사점
- 71 금리 상승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71 경제적 불평등과 빚투, 금융위기
- 71 해외의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과 시사점
- 72 코로나19 이후 소비성향 하락에 대한 논의
- 72 밀레니얼세대의 은퇴준비
- 72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 73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 73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차이
- 73 해외 민영 건강보험의 청구전산화 사례와 시사점
- 74 보험회사 사업모형 전환: IoT 기반 위험예방서비스
- 74 IFRS17 시행 시 주주배당가능이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4 코로나19 재확산과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
- 75 코로나19 이후 출산 및 혼인의 추이 변화
- 75 메타버스와 보험산업
- 75 대인배상 I 보험금 한도조정과 과잉진료
- 76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 차이
- 76 이사회 다양성 추구하고 금융회사 시사점
- 76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 77 사이버사고의 진화와 사이버보험 시장 동향

CONTENTS

- 77 보험산업 인적자원 고도화 방향
- 77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공급 지원 동향 및 시사점
- 78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 78 온라인채널 보험 가입자 상품·연령별 특성 분석
- 78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 79 코로나19가 자동차보험에 미친 영향 분석
- 80 우울증 현황과 보험산업의 역할
- 80 채권 재분류 현황과 시사점
- 80 AI 리스크와 전용보험의 필요성
- 80 국내 위성보험 현황과 시사점
- 81 토탈형 연금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 우려와 기회
- 81 해외 간병연계 연금보험 사례와 시사점
- 81 해외 공적연금 개혁동향과 시사점
- 81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출생아 30만 명의 의미
- 82 보험회사 ESG 경영 확대의 필요성
- 82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 82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
- 82 코로나19 장기화와 여행보험시장
- 83 코로나19로 인한 설계사 소득변화 특징
- 83 보험상품 리모델링과 소비자보호
- 83 의료비 증가의 거시경제학적 분석과 시사점
- 83 영국의 은퇴준비 인식제고 사례
- 84 해외 보험회사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활용 사례 및 시사점
- 84 사망률 개선과 연금상품 다양화
- 84 해외 헬스케어 서비스와 시사점
- 84 소비 유형 특성별 회복 가능성 논의
- 85 미국, 장기요양보험 리스크관리 실패와 시사점
- 85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특징과 시사점
- 85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 디지털전환
- 85 주요 물가 지표를 통해 본 물가 불안 장기화 가능성 논의
- 86 대출형 사모펀드시장 현황과 시사점
- 86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와 경영자 보상

- 86 보험산업의 동태적 효율성 제고 방안
- 86 최근 변액보험 해지율 상승과 시사점
- 87 백내장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 87 해외 주요국 보험업계의 장애인 고용과 시사점
- 87 보험회사의 장기 주식 투자 활성화 방안
- 87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 88 재보험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
- 88 최근 일반손해보험 성장 요인과 시사점
- 88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 현황과 시사점
- 88 개인 위험의 속성 변화와 시사점
- 89 IRP 시장 성장과 보험회사의 역할
- 89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
- 89 생명보험회사 개인보험 상품 집중도 변화
- 89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시사점
- 90 COP26의 정책합의와 보험산업의 시사점
- 90 우주여행보험의 성장 및 보편화 가능성
- 90 퇴직연금 운용 및 활용의 중요성
- 90 조건부자본증권을 이용한 보험회사 자본관리

KIRI 보험법리뷰

- 91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 요건과 감염병에 관한 소고
- 91 2020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 9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향후 과제
- 92 독일 무인자율주행차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92 보험중개사 조항 신설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92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非物件化)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
- 93 고가차 대물배상의 쟁점과 고려사항
- 93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
- 93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의 개요와 전망
- 94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I)
- 95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에 대한 검토
- 95 영국 위플래쉬 개혁의 시행 및 시사점

CONTENTS

- 95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 제고와 고려사항
- 95 보험설계사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법률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검토
- 96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 주요 내용 검토
- 96 승환계약 규제 범위에 대한 검토
- 96 승환계약 시 부활 청구에 대한 검토
- 96 영국 테스트케이스 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 97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
- 97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97 2021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KIRI 영상자료

- 98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장 역할
- 98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과 효과
- 98 알기 쉬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IFRS17
- 98 전동 킥보드,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 99 전동 킥보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해야 할까?
- 99 드론 리스크관리의 현황과 과제
- 99 알기 쉬운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
- 99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현황과 특징
- 100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세제
- 100 재난보험 공사협력의 배경 및 모형
- 100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진출 배경과 영향
- 100 베트남 손해보험시장 현황 및 특징

II

2021년 대외활동

Chapter 01

정책·경영세미나

- 10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 105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
- 106 보험산업의 AI 적용 현황과 과제

- 107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 108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 109 Next Insurance
- 110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111 보험산업의 미래 디지털 혁신 ‘인슈어테크’
- 112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Chapter 02

산학세미나

- 114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계리사의 역할
- 114 디지털전환과 피보험자 본인확인
- 115 디폴트옵션 도입 및 운영방안
- 115 중소기업 기금형제도 운영방안
- 116 AI 자산관리와 보험
- 116 국내 일반보험시장 현황 및 이슈
- 117 보험회사 대체투자 현황 및 이슈
- 117 재난보험 공사협력 모델 및 이슈
- 118 보험산업 디지털 전환과 운영리스크 이슈
- 118 보험모집시장 현황과 이슈 (I)
- 119 보험모집시장 현황과 이슈 (II)

Chapter 03

포럼

- 122 기업 사이버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 122 보험계약 관련 예금자보호제도 이슈와 과제
- 123 IFRS17 도입에 따른 계리제도 개선방안
- 123 IFRS17 최근 동향과 이슈사항
- 124 GA 자회사 설립 관련 법적 쟁점

Chapter 0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126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127 작업반/회의 참여
- 128 위원회/포럼/패널/자문 참여

CONTENTS

- 129 주요 기관과의 공동 연구
- 129 언론기고
- 130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III

2022년 주요 연구계획

1. 본업 역량 강화

- 132 Level 4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연구: 주요국 제도 비교
- 132 상품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 저·무해지 상품 사례 중심
- 132 근로자 소득상실위험 보장과 보험의 역할
- 133 중소기업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 사업연속성계획(BCP) 중심
- 133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 경영
- 133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상품 대응방안

2. 시장 혁신

- 134 보험시장의 미래: 디지털 환경과 MZ세대를 중심으로
- 134 디지털 보험회사 사업모델 연구
- 134 디지털 치료제 현황과 전망
- 135 해외 혁신적 보험서비스 현황 분석
- 135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135 보험산업의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 136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중복 보장 및 불일치 개선 연구
- 136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연구
- 136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3. 소비자 신뢰

- 137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보험금 청구(설문조사 분석)
- 137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보험 이해도(사전 연구)
- 137 인구 고령화가 개인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을 활용한 정량화
- 138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연구
- 138 분쟁 발생 시 약관해석기준에 관한 연구: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중심으로
- 138 자동차보험 상해 등급 개선 연구

4. ESG 경영

- 139 보험회사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 139 보험회사 ESG 평가 지표 연구
- 139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따른 제재리스크 대응방안

IV

2021년 일반현황

- 142 경영비전
- 142 연혁
- 14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144 임직원 현황

2021년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 이슈보고서

비교적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현재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

|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 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 KIRI 영상자료

보험산업 관련 주요 이슈의 핵심 내용을 짧은 동영상 콘텐츠로 제시

|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 CEO Report 및 CEO Brief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 포커스·이슈 분석

웹 격주간지 『KIRI 리포트』·웹 격월간지 『KIRI 보험법리뷰』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I

2021년 연구 활동

- Chapter 01 사업 재조정
- Chapter 02 위기대응력 강화
- Chapter 03 위험선별·인수능력 강화
- Chapter 04 판매채널 선진화
- Chapter 05 공·사 협력모형
- Chapter 06 소비자 신뢰 제고
- Chapter 07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Chapter 08 금융·보험 이슈 연구

2021년 계획과제 관련 보고서는 발간 및 심사 절차 진행 중인 보고서입니다.

Chapter 01

사업 재조정

-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영국 Legal & General과 Aviva 보험그룹 사례 -
-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일본 사례 -
-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
- 중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영국 Legal & General과 Aviva 보험그룹 사례

김규동(연구위원)·장철(연구위원)·김윤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영국의 Legal & General과 Aviva 보험그룹은 보장성보험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상품 중심의 사업 전략에서 탈피하고, 단체연금, 주택연금,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및 투자 자문 사업과 같은 다양한 퇴직소득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다. Legal & General과 Aviva 사례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험회사를 성장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금리와 고령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보험산업이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보험 선진국인 영국 보험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영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금리와 고령화라는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 판매채널 개혁방안, 연금자유화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은 증가하고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Solvency II 시행과 Brexit로 인해 영국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자본구조를 형성하고 영국과 유럽 국가의 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업 재조정이 필요했다. 연금자유화로 인한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들은 연금 사업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Legal & General과 Aviva는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퇴직소득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집중하였다. 이에 두 회사는 Aegon이 소유한 영국의 개인연금 포트폴리오와 연금 전문 보험회사인 Friends Life를 인수하였는데, 다른 회사의 개인연금 사업 축소를 오히려 연금 사업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두 회사는 투자 및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은퇴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Legal & General은 2014년 영국 보험협회(ABI)에서 탈퇴하고 투자협회(IA) 자격만 유지하는 식으로 자산관리 및 투자 및 투자자문 사업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손해보험사업을 완전히 매각하는 등 보장성보험 비중을 줄여나갔다. 반면, Aviva는 고객 중심의 종합 보험회사(Customer Composite Insurer)를 지향하면서, 고객이 전 생애에 걸쳐 자산관리·위험관리 등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투자하였다.

보험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일본 사례

이상우(수석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일본 보험회사 사례 조사 결과 대형사들은 20여 년간 전통사업을 혁신하는 한편 보험 관련성이 높은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기업 집단의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사들은 본업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성장 정체에 대비한 일본 보험회사들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미래 성장한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먼저 전통 보험업을 혁신하고, 미래사업 진출을 통해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보험회사 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고 성과를 분석한다. 사례 제시와 성과 분석을 통해 국내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내용

일본 보험회사들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이어진 정부의 보험 자유화와 규제 완화, 20여 년간 사업성장 정체에 따라 전통사업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사례 조사 결과,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 등의 대형사는 종전 전통 보험사업 중심에서 보험과 관련성이 높은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출 분야는 온라인 보험업, 법인 보험대리점업, 해외보험사업, 보증사업, 헬스케어, 간병사업 등이고, 최근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액단기보험업, 인슈어테크, 인슈어헬스, 서비스 플랫폼사업 등이다. 이들 대형사는 현재 기존 회사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등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자회사 진출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발전시키고, 그룹사 경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시너지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본업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보험회사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익 구조 다변화 추진 이후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스미토모생명과 SBI보험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성장 정체에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대형사의 경우 전통사업을 보완하여 그룹의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 및 진출하는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류성경(동서대학교 교수)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내실성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건전성이란 지급 여력비율 등 재무적 건전성뿐만 아니라 고객 및 사회와의 건전한 관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수익성은 보험회사도 기업인 이상 적정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을 말한다. 내실성장은 외형성장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최근 보험의 공급자인 보험회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여러 면에서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 보험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 전략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보험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또는 역성장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위험관리 역량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보험회사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의 버블 붕괴 이후 여러 보험회사들이 파산했으나, 이후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끝에 2010년대 이후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의 보험시장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소액단기보험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주요 보험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경영 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차원에서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사내 벤처기업 등을 활용한 고객니즈 발굴과 상품화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상품 전략 측면에서는 단품화를 통한 자체형 종합화 상품개발 검토, 환경변화를 기동적으로 상품 개발에 반영할 필요 등을, 셋째, 서비스 전략 측면에서는 상품에 결합된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과제를 서비스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 보험산업의 현황과 특징

이소양(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중국 보험시장은 1992년부터 대외개방되었으나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감독당국은 인보험 및 자동차보험 요율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이다.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은 투자자산 종류에 관한 제한으로 높지 않다. 보험소비자보호에 관한 각종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보험소비자보호 수준은 낮은 편이다.

국내 보험회사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였으며,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다른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중국 보험산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국 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중국 시장 공략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중국은 2019년 현재 수입보험료가 6,173억 달러로 2위의 보험 대국이며 2001~2019년에 주요국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 속도를 유지하였다. 중국 감독당국은 2000년대부터 인보험 요율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를 세 번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나,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이다.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투자자산 종류에 관한 제한으로 높지 않다.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험소비자보호에 관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보험소비자보호 수준은 낮은 편이다.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0년까지 50개 외국 보험회사는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2015~2019년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외국 보험회사 개수에 비추어 볼 때 작은 편이지만, 영업흑자를 내는 외국 보험회사 개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보험회사는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과정 및 시장환경을 이해하고 적절한 성장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hapter 02

위기대응력 강화

- 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
- 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
-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
- 보험회사 ESG 경영 현황 및 과제: 독일 알리안츠 사례 연구 -
-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리스크: 은행과 보험산업 중심으로 -
- 코로나19 충격과 세계경제 -
-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K-ICS 대응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연구

노건엽(연구위원)·한상용(연구위원)·박희우(연구위원)·이연지(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와 연관된 감독회계와 계리제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계리제도는 원가방식 보험부채에 기반하므로 단순히 시가방식 보험부채와 계리제도를 연계한다면 제도의 안정성, 계약자 간 형평성, 보험회사 경영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주배당가능이익 법인세, 자본관리 등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K-ICS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와 계리제도 간 관계를 재검토하고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 등 부채시가평가에 따른 계리제도의 이슈사항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이후 K-ICS 도입 및 부채 시가평가와 관련된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주요 내용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K-ICS는 주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와 연관된 감독회계와 보험부채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계리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계리제도는 책임준비금 외에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 관련 제도가 존재하며 국내 제도는 책임준비금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반면 해외는 책임준비금과 별도로 제도별 목적에 맞게 시행되었다. 향후에는 국내 계리제도도 책임준비금에 연계하지 않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제도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보호뿐만 아니라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 손익분석은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가 아닌 보험회사 손익 변동에 대한 구체적 원인 설명, 계약자배당은 계약자에 대한 합리적 이익 배분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시가방식 책임준비금은 계리제도뿐만 아니라 주주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 자본관리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선진시장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

황인창(연구위원)·이연지(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완화적 통화,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저금리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저금리환경이 장기화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감독당국이 저금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금리환경 영향 수준에 따라 적절한 완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장기 추세로 등장한 저금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저금리환경 장기화 원인과 전망을 살펴보고,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해외 보험시장에서의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보험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내용

최근 몇십 년간 관찰되는 금리 하락의 원인은 근본적인 경제적 요인 등 지속적 요인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요인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 금리는 역사적 최저점인 최근보다는 높지만 역사적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저금리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환경은 자본 감소, 금리리스크 증가 등 보험회사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익성 하락과 성장성 둔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 보험시장, 특히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저금리환경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적용단계, 적용형태, 적용대상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해외 감독당국이 활용하는 다양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선제적(예방적)일수록, 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고 작을수록 먼저 활용되고, 효과성이 클수록 실제 활용도가 높다.

해외 사례는 감독당국이 저금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금리환경 영향 수준에 따라 적절한 완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글로벌보험센터 | 보고서

연구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기업휴지보험은 코로나19로 보험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1월 23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7,851,219명, 사망자 수는 2,101,849명으로 2.2%의 치사율을 보였다. 누적확진자 수와 10만 명당 발생자 수는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치사율은 대부분 1~3%대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이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주요국 대부분은 2020년 상반기 GDP 성장률 하락 이후 하반기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수요 감소와 투자 수익의 하락으로 2020년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약 -3%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의 보험산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각국의 보험산업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기업휴지보험은 코로나19로 보험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 초기에 긴급자금 지원, 기업보조금, 근로자보조금 등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세계 각국 보험산업 관계자들은 보험서비스 연속성,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유동성관리 그리고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의 핵심기능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였다. 주요국 금융당국들은 각국의 코로나19 피해상황과 의료시스템 차이에 따라 자국의 여건에 맞추어 보험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료 환불, 보장범위 확대, 구호기금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보험회사 ESG 경영 현황 및 과제 : 독일 알리안츠 사례 연구

이승준(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알리안츠는 ESG 이사회를 정점으로 글로벌 사업부와 자회사까지 유기적 ESG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ESG 요소를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등 경영활동의 전 과정에 통합하는 ESG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세대 지나친 단기 수익추구로 인한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며 일어난 성찰과 반성으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장기 주주이익과 함께 고려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주요 내용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ESG 경영을 위한 해외 모범사례로 ESG 경영 확산의 선도자로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독일의 글로벌 보험그룹 알리안츠를 소개한다. 알리안츠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ESG 전략 아래 ESG 이사회를 정점으로 글로벌 사업부와 자회사까지 유기적인 ESG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ESG 요소를 보험인수와 자산운용 등 경영활동 전 과정에 통합하는 ESG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리스크 : 은행과 보험산업 중심으로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보고서

연구 배경

현재 금융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운영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은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리스크 비용을 줄이는 데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리스크 양상을 대분류-소분류-리스크 동인으로 체계화하여 기존 바젤 운영리스크 분류체계를 보완하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리스크의 실증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함께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머징 리스크로서의 디지털 운영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디지털 전환의 양상을 살펴보고,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분류·분석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디지털 운영리스크 또는 사이버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은 모두 운영리스크의 일부로서 금융산업이 직면한 시장 및 신용리스크에 비해 복잡하고, 리스크 동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리스크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리스크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 바젤의 운영리스크 분류체계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리스크 동인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이며,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영리스크 분류가 요구된다.

제안된 분류체계는 4가지 리스크 대분류, 13가지 리스크 하위유형 및 53가지 리스크 동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스템 및 기술 실패와 내부 프로세스 실패 등의 리스크 대분류 유형에서 디지털 전환과 밀접하게 연관된 리스크 동인을 구분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또한, 디지털 운영리스크로 인한 손실데이터를 기반으로 악의적/비악의적 디지털 리스크로 구분하였고, 악의적 리스크의 손실 빈도와 심도가 위험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손실 빈도와 심도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전가 기능의 향상 및 민관협력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제안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디지털 리스크에 관한 효과적 관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코로나19 충격과 세계경제

윤성훈(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코로나19 충격 확산으로 세계경제에서 나타난 전례 없는 현상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코로나19 충격 확산으로 세계경제에서 나타난 전례 없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에 방역과 관련된 정치 체제 논쟁, 국가 간 경제성장률 차이를 유발한 요인, 전례 없는 규모로 실행된 재정 및 통화정책과 시사점, 금융감독정책의 특징,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내용

방역 효과와 정치 체제 간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도 방역에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누적 확진자 규모와 경제성장률 간에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며, 수출 타격이 적은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 정도도 낮았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더라도 중앙은행은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물가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서비스 지속, 지급여력비율 및 유동성 위험 관리,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목표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였다. 코로나19 충격이 국가마다 다르고 법률 제도나 금융 시스템도 같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수단 역시 다양하나 대응 원칙은 유연성, 타이밍, 그리고 업계와의 소통 등 동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과 코로나19 충격이 나타난 2020년 모두 경기 침체했으나 2009년과는 다르게 2020년 주요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경기 침체의 원인이 다르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정책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택수요가 줄지 않았으며,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남유럽 재정위기 때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코로나19 충격 이전에 적절히 관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재정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동향분석실·연구조정실 | 보고서

연구 배경

2021년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정상화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021년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확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정상화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본 원고는 2021년 보험산업을 조망하고 2022년을 전망함으로써 보험산업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2022년 보험산업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보험료 성장여건 개선이 예상되나 코로나19 반사효과 소멸은 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 보험산업은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2022년 보험산업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보험료 성장여건 개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반사효과 소멸은 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 보험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이례적인 성장세에서 벗어나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하는 성장이 전망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생명보험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건강보험 성장,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 재유입 등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할 전망이다. 보장성보험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수요 회복이 예상되나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위축으로 종신보험 성장성이 약화되면서 질병·건강보험 중심의 2.7% 성장이 전망된다. 경제 정상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은 보장성보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IFRS 17과 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보장성보험 확대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2년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2% 증가가 전망된다.

손해보험

202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전년 대비 4.9% 증가가 전망된다. 2022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된다. 장기 보장성보험 중 질병·상해보험은 8.3% 증가가 전망되나, 증가율은 이전에 비하여 둔화될 전망이다. 질병·상해보험은 보장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전년 대비 21.4%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저축성보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22년 손해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8.0% 증가가 전망된다.

과제

시장 혁신, 본업역량 강화, 소비자 신뢰, ESG 경영을 2022년 보험산업의 4대 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2021년 과제로 제시된 사업 재조정과 경쟁적 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은 2022년에도 여전히 보험산업의 현안임을 강조한다.

국내 보험산업은 구조화된 저수익성과 불안정한 소비자 관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 성장 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장 혁신과 신뢰에 기초한 시장규율 정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시장 혁신,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신뢰, ESG 책임경영을 2022년 보험산업의 4대 과제로 제시한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 보험산업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경제적 역할은 물론 사회의 신뢰자본을 축적하는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1년 과제로 제시된 사업 재조정과 경쟁적 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은 2022년에도 여전히 보험산업의 현안임을 강조한다.

소비자층이 MZ세대와 고령층으로 분화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보험산업이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하려면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는 시장 혁신이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다양한 조직 형태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중심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경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위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그림자 상품규제는 영업행위 및 건전성 규제의 취약성과 비례하므로 K-ICS의 내실 있는 시행과 더불어 판매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시장규율이 확립되어야 한다.

한편, 소비자 신뢰 제고는 디지털에 능숙하고 사회적 의제에도 적극적인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국제규약으로 등장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상충된 위험을 인수하거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ESG 책임경영을 통해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보다 두터운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03

위험선별·인수능력 강화

- 재보험산업 발전 정책방향 -
-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
- 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 -
-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
- 한·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및 보험회사 진출 사례 -
-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배경 및 동향 -

재보험산업 발전 정책방향

임준(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국내 재보험산업 발전 전략으로 집중화와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틈새시장에 진출하는 히든챔피언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핵심 산업정책으로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재보험산업은 자본력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 재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산업정책과 관련된 경제학 분야의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국내 재보험산업 발전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

국내 재보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보험 허브를 만들어 외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챔피언(National Champion)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구조를 만들어주어 규모를 키운 후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집중화와 세계화를 추진하는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육성하는 것이다.

3가지 대안 가운데 세 번째 히든챔피언 전략을 우리나라 재보험산업 발전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재보험 허브 정책은 싱가포르와 같이 소규모 개방형 국가에 더 적절할 수 있고, 두 번째 국가챔피언 전략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내수시장 규모가 큰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든챔피언 전략의 핵심 산업정책으로 공학이나 자연과학(기상학, 지질학 등)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하였다.

자동차보험 국제비교 :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전용식(선임연구위원)·윤성훈(선임연구위원)·김연희(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손해율과 시장 경직성 현상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국제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과도한 대인배상 보험금은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고 자동차 보험료 조정의 경직성은 우리나라에서 뚜렷하게 관측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성장,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은 국민 생활에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로 성장하였다. 양질의 자동차보험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관측되는 현상이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지,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만 관측되는 현상인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보험료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손해액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대물배상 한도는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대인·대물배상 비용(보험금, Burning Cost)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 단기이고 크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차 수리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시장 경직성은 지속될 수 있다. 손해액 변동의 원인인 도덕적 해이 억제제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액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

이경희(상명대학교 교수) | 보고서

연구 배경

우리나라에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사회적 인식과 활용도는 매우 낮다. 가계부채의 56%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기간이 30~35년에 달해 차주가 부채를 변제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효율적인 보험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는 일반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과다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잠재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신용생명보험의 활용도 포함된다. 이에 신용생명보험 역사와 경험이 풍부한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신용생명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부채상속을 방지하여 가계재정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출기관의 부실채권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특히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청년층의 경우 가입금액 대비 보험료 측면에서 비용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이다.

1백년이 넘는 시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 및 주 보험감독기구에서 세부 종목(신용생명/신용상해질병/신용실업/신용재물보험, 10년 이상 모기지 대출)으로 구분하여 규제한다. 촘촘한 감독으로 관련 상품은 틈새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자발적 가입비율이 높고 가입자 만족도도 높다. 일본 역시 민간 은행과 공적 모기지대출 기관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 규모, 가계부채보유 비율 및 부채규모 감안 시 잠재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잠재수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용생명보험을 방카슈랑스 규제와 분리하여 상품 효용성에 초점을 두어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에 수반되는 보장상품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비용효율적인 단체보험방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상품설계 및 위험인수, 마케팅·모집판매 및 보험유지단계 등 각 단계별로 규제상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현행 법제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마련과 현행 규정 중심 규제체계의 한계를 인식한 새로운 규제기법 모색 및 미래지향적인 법제설계와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법제도적으로 고안될 필요가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인공지능(AI)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활용근거법규가 미비하고 그의 활용에 따른 리스크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상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법제개선 방향 및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금융규제상 고려할 요소는 적지 않다. 상품설계·요율 산출 및 위험인수의 경우 초개인화로 일정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는 사적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예상되며,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투명성·책임성 등 데이터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마케팅·모집판매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판매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술적 문제 발생과 알고리즘 오류·챗봇 이용 시 음성·화상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존재한다. 보험유지단계에서는 고객 유지에 필요한 최소혜택만 제공하는 문제와 보험금지급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오류, 데이터 미작동 등 운영리스크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 법제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규정중심 규제체계의 한계를 인식한 새로운 규제기법과 미래지향적 법제 설계 및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보험업 법제 정비과제로는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업무·외부위탁 규제 개선과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확대 및 인공지능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불완전 판매와 알고리즘 오류에 의한 피해, 차별적 취급 등을 예방하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배구조·감독체계 마련과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인공지능 이해도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인공지능 활용업무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약관 정비와 분쟁절차 정비,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인공지능 활용기술을 촉진하도록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한·일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및 보험회사 진출 사례

조용운(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회사가 노인장기요양 산업에 진출한 사례는 2001년 1개 비영리재단법인이 투자한 사례와 2016년 1개 영리보험회사가 투자한 사례가 전부이다. 경험이 적은 데다가 사업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 비급여 항목 확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야만 하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된 이후 보험회사는 요양산업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세부항목별로 매칭하는 방법으로 살펴보고, 비교·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리법인들이 요양산업에 진출할 경우 참조할 만한 사항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본다.

주요 내용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산업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개 비영리재단법인이 투자한 사례와 2016년 1개 영리보험회사가 투자한 사례가 전부이다. 경험이 적은 데다가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제도적으로 진출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법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 시설에 투자할 경우 사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장기요양서비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한·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나라를 비교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현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국한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추가로 '일용품 이외의 쇼핑', '애완동물 관리', '정원 청소 및 거실의 정리', '전자 기기의 작동 확인', '동거 가족의 식사' 등을 함께 비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야간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야간보호시설이 야간대응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은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형 노인요양시설의 확산을 위해 정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야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시장 참여 배경 및 동향

송윤아(연구위원)·홍보배(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사이버사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은 주로 사전적 보안 강화에 집중해 왔으나, 사이버사고의 경우 방어보다는 공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사후적 피해회복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사이버공격은 공격자, 표적, 피해양상 등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이에 최근 기업이 직면한 사이버리스크의 양적·질적 변화, 그로 인한 사이버보험 시장 내 수요 및 공급상의 변화와 보장공백을 분석하고 동 보장공백에 대한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보험선도국의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사이버공격은 비용 및 위험 대비 효과가 큰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 또는 범죄조직에서 테러조직, 준정부조직, 국가로 확대되고 사이버공격의 표적도 보안이 취약한 개인 및 중소기업에서 공급망 및 산업제어시스템 공격을 통해 대기업 및 국가기반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사고의 피해유형은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에서 재물·신체·영업중단손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공격의 진화와 함께 사이버보험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보험업계의 공급은 위축됨에 따라 향후 주요 손해유형에 대한 보장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사고로 인한 재물·신체·영업중단 손해, 무형자산 손해, 물리적 손실이 동반되지 않은 영업중단손해 등에 대한 보장공백이 두드러진다.

이에 주요국은 이미 자국에서 운영 중인 공사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재물·영업중단·배상책임 손해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 및 유동성을 제공하거나 제공 여부를 논의 중이다. 다만, 기존의 테러보험 프로그램이 물리적 테러리즘을 계기로 도입되어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프로그램 범위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사이버사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은 주로 사전적 보안 강화에 집중해 왔으나, 사이버사고의 경우 방어보다는 공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사후적 피해회복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Chapter 04

판매채널 선진화

디지털 전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연구 -
일본 보험대리점 규제체계 -

디지털 전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연구

김동겸(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정원석(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상품구조 변화, 비대면 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대로 향후 디지털채널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도는 증대될 것으로 보여, 거래당 사자 간 신뢰형성을 위해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모집시장의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채널별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능별 모집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을 계기로 모집시장의 변화방향과 주요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판매채널의 진화과정 및 제도 변화, 현행 모집시장의 문제점, 시장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평가하고, 향후 보험모집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보험회사에 있어 판매채널은 고객접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보험상품 구매동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면방식의 전속영업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내 보험모집시장은 2000년 이후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하면서 보험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편익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모집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들이 신설되었으나, 성장중심의 경영전략과 수수료 편향 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상품 판매자가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낮은 계약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상품구조 변화, 비대면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대,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우는 MZ세대의 부상, 디지털채널의 유용성·편의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보험상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디지털채널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디지털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 확산될 경우 시장참여자 간 신뢰형성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공시체계 정비 등 판매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모집시장의 효율성 증진, 소비자 편익 제고, 판매채널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개별 채널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능별 모집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 보험대리점 규제체계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일본 금융당국과 업계는 보험 대리점 시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험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고객 중심 업무운영을 위해 대리점 수수료 산정 시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불완전판매와 과열경쟁 촉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보험시장 역시 국내와 유사한 문제들이 노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보험대리점 규율체계를 정비하였다. 국내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일본의 제도를 조사하였다.

주요 내용

일본은 2014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특정보험모집인 개념을 도입하고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청 감독을 법제화하였다. 법 개정의 목적은 보험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보험대리점 대형화에 따른 판매규제 정비, 소비자보호 강화에 있다. 이를 통해 모집인의 정보 제공 및 고객의향 파악 의무 및 승합대리점의 비교추천 및 체제정비 의무 관련 규제가 개정·신설되었다. 한편 판매자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증인이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아울러 일본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2018년 이후 고객 중심의 업무운영을 위해 대리점 수수료 산정 시 서비스의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특정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 보수를 폐지하는 등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대리점 수수료 체계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로 사후관리 미흡, 고객의향과 부합하지 않은 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수수료 산정 시 판매량 등 양적 평가항목 외에 계약유지율, 판매자 전문성, 사후관리서비스, 고객대응시스템 등 질적 평가항목을 반영하도록 개편하였다.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hapter 05

공·사 협력모형

- 건강보장체계에 대한 연구 -
-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연구 -
-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 -
- 보험회사 장기대체투자 현황과 과제 -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역할과 과제 -

건강보장체계에 대한 연구

정성희(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급여본인부담금 보장 및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미보장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요·공급 모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건강보장 강화 추진에 따라 공보험 중심의 복지정책 필요성이나 민영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 현안 등에 따라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건강보장체계에 대한 연구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건강보장체계와 관련하여 수행되어 온 연구 성과를 ①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및 ② 건강보장체계의 비효율성과 과제로 분류하여 각각 진단 및 평가하고, 주요 결과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보장체계 연구에 대해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연구 수요를 도출하고,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정립하였다.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연구

송윤아(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주요국 12개 공사협력 재난 보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i) 공사협력 프로그램은 대부분 정부의 개입 형태에 상관없이 보험집단의 자체재원조달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자체재원조달의 방향성을 가진다. (ii) 의무화 방식에는 의무가입, 의무특약·담보, 의무제안, 임의제안 등이 있다. (iii) 보험료 산정방식으로는 고정요율, 위험반영요율, 자산·소득반영요율 등이 있다. (iv)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출구전략은 ①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거나, ② 보험회사의 위험보유를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③ 재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에 위험을 전가하거나, 또는 ④ 민영보험회사에 자체 유사담보 상품 개발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관찰된다.

자연재해,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감염병 등 세계적으로 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이 재난에 대비한 유용한 리스크 파이낸싱 기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재난보험 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에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설계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주요국 12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먼저, 정부는 원보험자, 재보험자, 지급보증자, 유동성제공자, 그림자지원 등의 형태로 재난보험시장에 개입하며, 공사협력 프로그램은 대부분 정부의 개입 형태에 상관없이 보험집단의 자체재원조달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자체재원조달의 방향성을 가진다. 둘째, 공사협력 재난보험의 의무화 방식에는 의무가입, 의무특약·담보, 의무제안, 임의제안 등이 있다. 분석대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표적집단 전체의 가입을 강제한 사례가 없으며, 보험회사의 선별인수가 가능한 임의제안 역시 우리나라 풍수해보험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공사협력 재난보험에서는 이례적인 접근방식이다. 셋째,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보험료 산정방식으로는 고정요율, 위험반영요율, 자산·소득반영요율 등이 있다. 고정요율은 연대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거나, 복수손인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택되며, 위험도에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선택적 가입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일정 수준 의무화된다. 개별 목적물의 실제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험반영 지역별 차등요율이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출구전략은 ①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거나, ② 보험회사의 위험보유를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③ 재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에 위험을 전가하거나, 또는 ④ 민영보험회사에 자체 유사담보 상품 개발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관찰된다.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

한상용(연구위원)·문혜정(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국내에서 2020년 초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손실보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향후 국내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험회사들이 공·사협력을 통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방안의 마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의 보상을 위해 현재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중단이나 단축과 같은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초래하는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은 국가의 지원 없이 민간 보험회사들이 단독으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공·사협력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효율적인 공·사협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해의 보상에 있어 국가 재보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팬데믹 리스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 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회사들은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상품의 판매와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있어 보험회사의 기존 사업구조와 사업노하우를 활용하고 보험료 감면이나 리스크 기반 보험료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의 사용을 통해 사업자들이 사업연속성 계획이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사전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와 보험회사는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공·사협력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 장기대체투자 현황과 과제

박희우(연구위원)·박은빈(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저금리 고착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며,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은 보험회사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그린뉴딜 관련 SOC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K-ICS에서도 투자 유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체투자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아 사전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운용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수익률 제고, ALM을 위한 장기투자 확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을 위해 대체투자를 확대하였지만,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 보험회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국가별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의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운용자산 대비 높은 비중의 대체투자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부동산, SOC 등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대체투자 유형의 구성비가 높아 헤지펀드, 사모주식(PE)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처의 비중이 높은 미국 보험회사에 비해 부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부동산·항공기 등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손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고착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며,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은 보험회사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그린뉴딜 관련 SOC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K-ICS에서도 투자 유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체투자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아 사전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보험회사는 내부 대체투자인력 양성 및 외부 위탁운용체계 전문화를 통해 대체투자 운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는 공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모거래가 많아 현황과 특징을 직접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향후 가용 자료가 확대될 경우 다양한 추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역할과 과제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공·사협력의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한편, 민영보험 역할 정립에서는 공·사 간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보완적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성과 민영건강보험의 보완적인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사 건강보험의 발전적인 관계 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주요 내용

공·사 건강보험의 정책·제도는 보험, 의사, 국민 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 건강보험이 직면한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 대비한 상생 전략을 검토하였다. 또한, 실손보험의 지속성 위기를 극복하고 공보험의 보완 역할을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역할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Chapter 06

소비자 신뢰 제고

- 2020/202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MZ세대의 은퇴저축 -
- 디지털 보험시대, 보험소비자 경험 분석: MZ세대를 중심으로 -
-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
- 해외 주요국의 대안적 보험분쟁해결제도 -
- 보험업 영업행위 규제체계 연구 -
- 온라인 보험 서비스 관련 모집 기준 제안 -
- 보험소비자 권리와 사후적 규제체계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으로 -
-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

2020/2021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 MZ세대의 은퇴저축

변혜원(연구위원)·손지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개편 후 첫 번째 「보험소비자 행태 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위험 인식·관리에 해당하는 은퇴 소득위험관리를 다루었는데, 은퇴준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계획이나 실행을 미루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행태과학에 기초한 넛지를 사용하여 은퇴저축을 독려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자신의 재무관리, 은퇴 후 삶에 대한 생각 등도 조사하였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가입, 의향, 니즈 등에 대해 조사해 왔으나, 활용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된 「보험소비자 행태조사」는 보험소비자의 금융행태 특성·원인 분석, 보험소비자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의 개발·효과 평가를 통해 경영·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20·30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기대수명이 길어 은퇴 후 삶을 위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은 경제성장률, 금리,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자산축적 환경을 직면하고 있어 젊은 세대의 은퇴준비는 부모세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 행태조사에 의하면 20·30대 중 상당수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은퇴준비를 고려하지 않거나, 은퇴준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계획이나 실행을 미루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행태과학에 기초한 넛지를 사용하여 은퇴저축을 독려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넛지를 이용해 소비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은퇴 후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한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중년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의 효과는 응답자의 고용상태, 소득, 자산, 개인퇴직연금·연금저축 보유 여부, 금융 이해력, 혼인 여부, 성별 등을 제어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동 결과는 젊은 세대에게 은퇴저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노후준비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넛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보험시대, 보험소비자 경험 분석 : MZ세대를 중심으로

손재희(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MZ세대는 디지털에 기반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며,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미래 주력 보험소비층으로 자리잡을 MZ세대의 디지털 역량 파악 및 보험소비 경험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디지털 보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MZ세대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및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타 세대와 비교하여 차별성을 살펴본다. 아울러 소비자설문조사를 실시하여 MZ세대의 채널 선택 특징을 살펴보고 보험소비 여정 전반에 걸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보험회사는 미래 주 소비층이자 디지털세대인 MZ세대의 보험소비 이해 부족으로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낮은 MZ세대 보험가입률은 현재 상품·서비스가 이들이 원하는 가치·소비 방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MZ세대의 보험소비 경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들이 보험소비 여정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요 내용

MZ세대는 디지털에 기반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며,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MZ세대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디지털 활용 수준 및 금융소비 이용태도에 대한 이해와 보험소비 경험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MZ세대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량 및 활용 측면에서 타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X세대와 비교 시 디지털정보화 종합지수가 약 1.2배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금융거래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정보 이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MZ세대의 보험소비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MZ세대는 대체로 보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탐색 시에는 온라인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시에는 설계사 채널의 활용 비중이 가장 높지만 보험회사 웹/앱을 통한 가입 비중도 타 세대 대비 높은 편이었다. 만족도 분석 결과, MZ세대는 보험소비 여정을 통해 일관된 만족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며, 보험가입단계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채널을 통한 가입 시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그리고 보험소비 여정 전반에 걸쳐 MZ세대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합리성’과 ‘자기주도성’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는 다가올 디지털 보험시대 전략 방향 및 제공가치 결정 시 신속성·편리성을 넘어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의한 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관한 연구

백영화(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비교 안내 시점,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 도입 방안,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감독당국의 해석 및 제재 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규제를 준수함에 있어서 해석상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향후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었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황현아(연구위원)·정성희(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중보상을 허용하는 방식보다는 상한액 초과금 지원 방식을 변경하여 의료비 일시적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와 관련하여,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약관 규정, 기존의 분쟁조정 사례 및 판례, 선행연구 및 유관기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쟁점을 도출하고,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의료비 보장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하, '상한액 초과금'이라 함)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나, 사후환급의 경우 의료비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에 시차가 존재하여 일시적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에 환급되는 상한액 초과금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대상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되므로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환급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바, 이 부분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및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사후환급금 상당의 일시적 의료비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의료비 지출과 환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만약 일각의 주장과 같이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중보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컨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는 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유도하여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대안적 보험분쟁해결제도

변혜원(연구위원)·손재희(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대안적 분쟁해결은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재판)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을 뜻한다. ADR은 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즉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모, 복잡한 사법 절차 진입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국에서는 대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해결을 위해 ADR기관의 정비 및 관련 법제의 보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내 ADR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앞서 ADR제도가 활성화된 주요국의 보험(금융) ADR기관의 현황 및 특징을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ADR의 네 가지 원칙 중 공평성, 투명성, 유효성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대안적 분쟁해결(ADR)은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모, 복잡한 사법절차 진입장벽 등 소송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ADR제도가 활성화된 주요국의 보험(금융) ADR기관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국내 ADR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의 보험(금융) ADR기관의 현황 및 특징을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ADR의 네 가지 원칙 중 공평성, 투명성, 유효성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주요국의 보험 ADR기관은 공통적으로 공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특히 공평성 확보의 핵심 요소인 ombudsman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의 보장, 특정 자격요건 마련, 선임절차의 마련, 자문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의 역할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mbudsman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ombudsman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국가마다 구속력의 유무나 조건을 달리하고 있다. 영국, 호주, 독일의 경우, 소비자가 ombudsman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에게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한다. 일본에서는 지정분쟁조정기관이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1개월 안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여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LMA의 경우에는 ombudsman의 결정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6개 국가의 ADR제도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였으나, 향후 연구를 통해 ADR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법제도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입체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 영업행위 규제체계 연구

양승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보험 영업행위 규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의 규제 준수 부담 기증이 예상된다. 명확성이나 규제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도 깊은 검토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법이자 금융통합법틀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 규제 중 보험업 특유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보험업 영업행위 관련 주요 규제의 내용 및 이관·존치되는 규제 간의 적용관계 등을 정리·분석하여 규제 불명확성을 감소시키고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주요 내용

보험업법은 제4장 제1절(모집종사자) 중 일부와 제2절(모집 관련 준수사항)에서 보험상품의 영업행위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이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 특히 이른바 6대 영업행위 규제(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삭제되었으나, 나머지는 보험에 특유한 규제로서 보험업법에 존치된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4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제1절은 보험업법에 규정이 없는 신의성실의무, 관리책임 등 일반원칙을 새로 규정하고, 제2절은 6대 영업행위 규제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제3절은 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특유한 준수사항 내지 영업행위 준칙을 규정한다. 제2절의 6대 영업행위 규제는 보험업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으나 의무 주체, 적용 대상, 금지행위 유형,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변경, 확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수법자는 법규 준수를 위해 두 법률의 내용을 비교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 초기에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나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 등과 관련하여 명확성이나 규제 타당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는 바,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보험 서비스 관련 모집 기준 제안

백영화(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보험 관련 서비스 중에서 그 행위의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의 제반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다.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 사례,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보면,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를 목적으로 특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플랫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행위 등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보험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의 제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보험업법 체계,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 해외 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다양한 보험 관련 서비스 중에서 보험업법상의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기본적으로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려면 특정 보험상품 또는 적어도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을 전제로,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나 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전제하에서, ① 특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특정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행위, ③ 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④ 특정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⑤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행위, ⑥ 플랫폼에서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험계약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보험 모집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행위들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로서 자격 있는 자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 권리와 사후적 구제체계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으로

양승현(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는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 제도의 활용 양태와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권익구제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다. 금융소비자의 실효적 보호와 규제 준수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후 변경사항, 법령의 체계 및 세부 내용을 정리·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지난 9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① 금융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② (i)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직접 손해배상책임과 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며, (ii) 금융소비자의 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열람요구권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③ 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금융상품의 판매로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될 경우 조기에 판매를 금지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권을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분쟁 조정 중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 금융감독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판매제한명령의 발동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활용되는 양태와 추이를 지켜보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바, 향후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검토,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노현주(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마이데이터 정책은 기존의 기업 중심 데이터 활용을 개인 중심의 활용체계로 전환하고 필요한 법적권한 및 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정보주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 아래, 제3사업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 보유기관은 표준화된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기존 기업 중심의 개인데이터 활용을 개인주도형으로 전환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신설되었다. 기업에게는 고객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자,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위기이기도 하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이 금융 산업과 보험회사에 주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마이데이터 정책은 EU, 영국,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당국도 적극 도입하여 데이터 3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같은 금융서비스업 신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이 동의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 통합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수 및 겸영업무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 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리행사, 투자자문·일임업 등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맞물려 본격적인 금융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산업도 디지털 전환과 함께 플랫폼 경쟁 본격화에 대비하여 개방형 금융생태계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플랫폼 시대의 고객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신속한 고객니즈 인지와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적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고객데이터 자산화 역량을 고도화 하는 한편 고객 중심으로 업무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보 보안을 비롯한 운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개별 회사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보험 업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가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향후 건강, 공공 등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경쟁업계와 차별화된 보험업계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기반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Chapter 07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 개선

- 국가보조금 건전성 제고 방안 -
- 아시아 보증보험시장 발전방안 연구 -
-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연구 -
- 민간발주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 소방맞춤형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 -
- 금융민원 처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 -

국가보조금 건전성 제고 방안

조재린(산학보험연구센터장)·성주호(경희대학교 교수)·박정희(선임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부정수급 관련 정책들은 주로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에 치중되었으며,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실효성 있게 환수할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부정수급된 국고보조금의 환수 방안으로 보조금에 대한 사전적 채권 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채권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담보, 유가증권 등)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제안하였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금 재정의 투명성 제고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하였으나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개념을 정리하고 부정수급 관련 현황을 살펴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진행해 국고보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원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예산은 2008년 37.7조 원에서 2021년 97.9조 원으로 연평균 7%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사업자의 선정 절차 강화 및 보조금의 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부정수급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부정수급 관련 정책들은 주로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에 치중되었으며,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실효성 있게 환수할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부정수급된 국고보조금의 환수 방안으로 보조금에 대한 사전적 채권 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채권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담보, 유가증권 등)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제안하였다.

아시아 보증보험시장 발전방안 연구

김석영(선임연구위원)·손지영(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베트남 시장에서는 영업중심 전략으로의 전환과 법인화 추진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사 확보 및 향후 지분 인수를 추진해야 한다. 필리핀 시장에서는 현지 정보 축적 및 전문가 육성 그리고 금융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얀마 시장에서는 지역전문가 파견과 함께 시장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가의 경제 발달 과정에서 보증보험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상황은 우리나라 70~80년대와 비슷하여 이 시기를 경험한 서울보증보험(SGI)은 한국의 보증사업 모델을 동남아 국가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이 동남아 4개국에 보증보험을 정착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장 전략과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

해외사업은 SGI의 신성장동력이다. SGI는 2000년 초반 베트남 시장을 시작으로 기존 고객을 추종하는 국제적 전략(international strategy)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제는 해외시장 현지 고객에 초점을 둔 국가별 전략(multidomestic strategy)으로 해외사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는 동남아시아로 통칭되지만 국가별전략 관점에서 현지 중심으로 각 시장에 적절한 전략을 확정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Grid 모형을 활용해서 합리적인 해외시장 진출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미얀마는 시장 발달 단계가 다르며 법제와 시장 관행도 상이하여 주도면밀한 국가별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 4개국에 대한 내부 지역전문가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SGI의 진출이 동남아 파트너 국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GI는 단기, 중기, 장기 의 원원 전략과 비전 필요하다.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연구

임준(연구위원)·이상우(수석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진옥희(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일본 보험그룹은 판매채널별로 특화된 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상품, 소액단순 상품, 그리고 지역기반 보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 보험그룹의 경우에는 고객군별 또는 상품별로 특화된 보험회사를 보유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 보험그룹의 경우에는 대다수 보험그룹이 종합보험회사와 함께 전문보험회사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그동안 금융그룹별로 생보·손보 각각 1개씩만 허가를 해주고,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를 허용하는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 필요성 증가를 감안할 때,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일본 니혼생명그룹은 판매채널별로 특화된 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니혼생명은 전속 설계사 특화 보험회사이고, Nippon Wealth Life는 방카슈랑스 특화, 하나사쿠생명은 대리점 특화, 그리고 타이주생명은 단체시장 특화 보험회사이다. 한편, 디지털 상품 및 소액·단순 상품 수요, 지역 기반 보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 보험그룹의 경우에는 고객군별 또는 상품별로 특화된 보험회사를 보유한 사례가 존재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고객군을 우량 고객군, 표준 고객군, 비표준 고객군으로 구분하고 고객군별로 특화된 보험회사를 별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뉴욕생명 그룹의 경우에는 모회사는 유배당 상품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회사는 무배당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연금보험, 건강보험, 책임보험 등과 같은 특정종목의 상품공급 확대를 위해 전문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정책 시행 이후 대다수 보험그룹이 종합보험회사와 함께 전문보험회사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안보험그룹의 경우 종합생명보험회사인 평안생명보험회사 이외에 전문보험회사인 평안연금보험회사와 평안건강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발주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조재린(산학보험연구센터장)·김혜성(산학협력센터 연구위원)·김진역(수석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지급보증 의무화 대상인 공사 금액 및 기간의 범위, 지급보증 금액 결정 산식, 지급보증 상품 유형, 상품 제공기관의 범위, 지급보증 미이행에 따른 벌칙, 지급보증제도의 도급계약 프로세스 내재화 방안, 지급보증 활성화 우선 순위 목표군이며, 이에 따른 법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소방시설 공사에서 민간 발주의 경우 발주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 않는 경우 공사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및 도입방안,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상품운영 방안, 소방산업 공제조합의 역할 및 사업 참여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민간 발주 소방시설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발주자와 공사업체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거래 관행의 실태, 미수 피해 현황, 주요 피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최근 5년간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한 비율이 29.6%에 달하는 미수 피해가 상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방시설 관련 오작동 현황, 화재 피해 사례 등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 보장의 제도적 취약점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현행 구제 절차의 낮은 실효성으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에 대한 공사업체 도입 요구가 높다는 것을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공사대금 채권 보호에 관련된 국내외 제도와 운영 실태 조사, 소방시설 공사업의 업종 특성 분석, 공사업체 설문 조사를 토대로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급보증 의무화 대상인 공사 금액 및 기간의 범위, 지급보증 금액 결정 산식, 지급보증 상품 유형, 상품 제공기관의 범위, 지급보증 미이행에 따른 벌칙, 지급보증 제도의 도급계약 프로세스 내재화 방안, 지급보증 활성화 우선 순위 목표군이며, 이에 따른 법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소방산업 공제조합의 상품 제공을 통한 공급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공제조합의 상품 제공을 위한 제도적 제약 요인과 법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의 신용공제 상품개발 방안,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 참여 로드맵, 사업진입 단계의 운영모형을 설계하였다.

소방맞춤형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

조재린(산학보험연구센터장)·황진태(대구대학교 교수)·서대교(건국대학교 교수)·박정희(선임연구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기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도별 보장편차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일반공무원과 분리된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제시하면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보장수준 상향조정, 가족보장, 은퇴 후 개인보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시도별 보장편차 해소를 위해 소방청 중심의 통합운영과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였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과중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에 대해 이들의 보건안전과 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 초점을 두고서 기존 단체보험에서의 보장수준과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

현행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장수준이 낮으며 업무적 특수성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공무원과 분리된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맞춤형 단체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기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시도별로 보장편차가 심하다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방청을 중심으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보장담보로는 사망을 비롯해 수술비, 암진단비,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입·통원 실비 등이 있었다. 특히, 이들 담보의 다수는 공상승인이 어려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통한 이들 보장담보는 중요하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통합운영 방식으로는 보험회사 협력형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이 주도하는 형태의 모델은 현행법상 법적 및 제도적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이다. 보장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로 퇴직 이후 발병 가능성도 크므로 퇴직 이후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다. 또한 현행 사망보험금 수준은 유족의 안정적인 경제자립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므로 사망보험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암진단비의 상향 조정과 함께 5종 수술 보장도 중요하며, 부모는 제외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민원 처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

변혜원(연구위원)·황현아(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손지영(연구위원) | 보고서

연구 배경

금융민원의 증가로 민원처리 기간이 장기화되어 신속·적정한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 감축·분산 방안, 인력 확충을 통한 민원처리 역량 강화 방안,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선결과제로서 금융민원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 건수와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민원 업무 증가로 인한 민원처리기간 장기화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금융민원이 보다 신속·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금융민원 처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민원처리업무상 가장 큰 문제는 과중한 업무량과 악성민원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금융민원 처리 효율화 방안은 크게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 감축·분산,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역량 강화, 반복·악성민원 대응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i) 금융민원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ii)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확대거나, (iii) 중요도가 낮은 민원을 외부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i) 내부 업무처리 효율화, (ii) 관련 인력 및 예산 확충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iii) 민원해결 전담 독립기구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반복·악성민원 대응을 위해서는 (i) 기존 관련 제도를 점검·보완, (ii) 반복·악성민원 인지와 제외를 자동화 시스템 도입, (iii) 민원 대행업체 규제, (iv) 고령민원인 응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효율화 방안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관련 법령에서 금융민원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적격성” 요건을 도입할 것인지와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금융민원은 크게 분쟁해결 측면과 금융회사 감독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 바, 적격성 요건의 내용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쟁해결 측면에서는 금융분쟁과의 관련성 및 권리보호 필요성을, 금융회사 감독 측면에서는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와의 관련성을 적격성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08

금융·보험 이슈 연구

CEO Report(제2021-1~12호) | CEO Brief(제2021-1~22호) -
KIRI 리포트(제511~536호) -
KIRI 보험법리뷰(제9~14호) -
KIRI 영상자료(제2021-1~12호) -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김동겸(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1-1호

최근 일부 보험회사의 제판분리 추진은 환경 변화와 회사 운영실태에 기초한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 산물로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향후 업권 내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의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모집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보험업 진출 확대,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감독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 입법경과 및 향후 과제

양승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1호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험산업 및 고용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정부 당국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산업과 고용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외화보험 현황과 과제

김규동(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2호

외화보험은 유하자금 및 안전자산 확보와 같은 외화 수요 및 원화보험 대비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최근 판매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환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환차손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교육과 상품설명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 수익성과 대응방안: 내재가치를 중심으로

노건엽(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1-2호 | CEO Brief 제2021-3호

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과 수익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19년 말 이익규모는 자본비용을 고려한 필요이익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과부족한 상황이다. 보험산업은 일회성 처분이익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보험회사는 수익성 악화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고금리 보유계약 관리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 및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정착률을 유도해야 한다.

보험업 경쟁도 평가

임준(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4호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경쟁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다. 특히, 보험회사 규모나 조직형태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규모 측면에서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소액단기보험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조직형태 측면에서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인가정책(1사 1라이선스) 유연화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산업 대토론회: 패널토론 요약

김세중(연구위원)·박은빈(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5호

보험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상품 및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디지털화 요구, 빅테크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나, 보험산업의 자생력과 기회요인에 대한 희망도 공존한다. 보험산업은 해외진출 및 신사업영역 확대, 공·사협력과 재난위험 대응,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 및 판매채널 구축, 타 업권과의 협력 및 상생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황현아(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1-4호 | CEO Brief 제2021-6호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자동차 보유자를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자동차 대중화 이후에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담 적정화 및 보험금 지출 합리화가 중요해졌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이동수단 관련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고, 공유 플랫폼 및 통합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전통적, 현대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며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해 나간다면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자산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의 영향

정원석(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7호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이라 함)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실적배당형 투자를 통해 수익률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와 가입자의 손실위험 노출 및 금융회사 영업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가입자 교육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입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변액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박희우(연구위원)·장철(연구위원)·노건엽(연구위원)·김석영(선임연구위원)·박은빈(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1-3호

최근 변액보험시장에서는 전통적 생명보험시장과 달리 중소형사의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축성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변액보험시장 점유율 상위 5개사는 펀드 수익률 제고, 차별화된 투자상품 제공, 종신연금 보증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사업비·해지 공제비용 등을 낮춰 소비자의 손실 부담을 완화하였다. 현재 변액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변액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률을 제고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구조 및 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 필요성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8호

현재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자적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소비자(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다양한 방식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시행 중인 해외 사례와 같이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황현아(연구위원)·정성희(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9호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하, '초과금'이라 함)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초과금은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초과금에 대한 의료비 보장 공백은 환자의 진료비 납부 시점과 건강보험공단의 초과금 지급 시점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그 시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GA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적 쟁점

백영화(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10호

보험회사가 GA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회사와 GA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GA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영업양도 해당 여부, 보험설계사의 이동 시 유지관리수수료의 지급 문제, 고객정보 사용 문제 등 보험회사의 GA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021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동향분석실

CEO Report 제2021-5호

2021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투자와 재화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민간소비 증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1% 성장이 전망되며,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 증가가 전망되나,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4% 감소가 예상된다.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8% 증가가 전망되며, 퇴직연금 제외 시 4.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1년 보험산업 신계약 초회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2.1% 감소가 전망된다.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황인창(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1-6호 | CEO Brief 제2021-11호

최근 빅테크는 주력사업(비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회사에게 경쟁심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판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감소 등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업 다각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책당국은 시장 혁신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보험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익 완화, 불공정경쟁 및 독과점 억제, 보험회사의 위험추구 및 빅테크의 시스템리스크 차단,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 소외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Next Insurance (I):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손재희(연구위원)·박희우(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1-7호 | CEO Brief 제2021-12호

최근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보험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고 보험업의 가치사슬을 자동화·정교화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 간 초연결화는 보험 생태계 형성을 촉진하고, 이는 보험시장 내 경쟁구도와 핵심 역량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디지털 환경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및 데이터를 성장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 디지털 소외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Next Insurance (II):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1-8호 | CEO Brief 제2021-13호

고령화 심화라는 양적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등장,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양극화 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보험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는 보험시장의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산업은 사업영역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보험시장 분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는 각기 다른 시장에 대응한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은 미래에도 '보험'이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Next Insurance (III): 보험산업과 ESG

변혜원(연구위원)·김동겸(연구위원)·손재희(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1-9호 | CEO Brief 제2021-14호

ESG는 기업가치는 물론 이해관계자 가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들로서,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증대,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 ESG 요소의 자본시장 영향력 확대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도 이미 보유한 ESG 리스크를 점검·관리하는 동시에 ESG 이행 수준에 대한 소비자 및 투자자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명확한 ESG 전략을 수립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주된 역할 수행에 ESG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Next Insurance (IV): 위험의 진화와 보험의 역할

정성희(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15호

기후 변화로 재난의 손실 보전 및 사전 예방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요구되고, 디지털 환경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로 개인 일상생활과 사이버 위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산업은 디지털 활용·데이터 역량 강화, 공급자 간 파트너십 확대, 재난 위험 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방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 관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과 기업 경영의 위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이 요구된다.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과제: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17호

미국에서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정치적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부·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 중이다. 플랫폼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플랫폼에 대한 기존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1-10호 | CEO Brief 제2021-17호

보험회사 CEO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가 정상화된 이후 성장성 회복을 기대하였다. 디지털화 목표는 기존 프로세스 및 사업모형 적용을 넘어 사업모형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및 기술 독점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력 상품전략으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보장성보험을 꼽고 있으며, 신사업 분야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루었다.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

조영현(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1-11호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으로 인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중 유동성과 자금흐름을 고려할 때, 저축성보험 수요 변화는 미미하고 변액보험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 국공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기업대출은 취약기업의 상환 능력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리 상승에 의해 RBC 비율 하락이 예상되며,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지급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신속하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강성호(선임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1-12호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양질의 요양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실시한 2019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71.1%는 긍정적이었다.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 긍정적인 주요 이유로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 간의 강한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참여에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경영리스크 부담 등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하므로 시장친화적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18호

즉시연금보험 관련 소송에서 최근 보험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 계산방법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었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의 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기존 판결들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1심 법원들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소송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규제 방향

황인창(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19호

최근 금융산업에서 디지털기술 기반 혁신이 확산되어 금융산업 구조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 금융규제 체계 하에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유연한 금융규제 체계 전환, 특정기업 시장지배력 확대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보호 관련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법적책임 부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방향

윤성훈(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20호

미국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공급망 차질 등으로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고용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여전히 크게 미달한다. 그동안 연준은 물가보다는 실물경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기준금리를 결정해 왔다. 따라서 연준이 밝힌 바와 같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와 제도 개선 방향

전용식(선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21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는 2019년 기준 경상환자 진료비의 64.5%로 추산되고, 경상환자의 29.3%는 과잉진료 의심 그룹으로, 그리고 한방진료 이용률, 입원율, 장기 통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미상해 진단·치료 가이드라인 확립,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 한방 비급여 등 진료수가 조정,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공·사 건강보험 역할에 대한 논의

정성희(연구위원)

CEO Brief 제2021-22호

보험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 모두 공감하였다. 한편, 실손보험의 비정상적 보장구조가 공·사 건강보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 간 의견이 상충되었다. 향후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사 간에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채널의 구성 변화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1호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은 모두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20년 들어 모바일 쇼핑을 중심으로 과거와는 다른 추세가 발견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비중은 추세적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모바일 쇼핑의 비중은 모바일 쇼핑과 인터넷 쇼핑 사이의 성장률 갭이 꾸준히 축소되면서 구조적으로 비중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판매에서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정체되는 현상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1호

주요국 감독당국은 보험서비스 지속, 지급여력비율 및 유동성 위험 관리, 보험계약자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국가마다 다르고 법률 제도나 금융시스템도 같지 않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대응 수단 역시 국가별로 다르나, 대응 원칙은 유연성, 타이밍, 그리고 업계와의 소통 등 동일하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과 더불어 감독당국의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노력도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개선방안

기승도(수석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2호

정부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2015년 8월)하였으나 홍보,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제도의 결합으로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홍보 측면에서, 대체부품이라는 용어를 ‘품질인증부품 등’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용어로 변경하고, 둘째는 수요 측면에서, 차대차 충돌사고 수리 시에 실손보상원칙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하되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같음하며, 셋째는 공급 측면에서, 디자인권 제한 대상부품 선정을 통한 1차 협력업체, 인증부품 제조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KIRI 리포트

해외 외화보험시장 성장 및 정책대응과 국내 시사점

변해원(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3호

최근 외화보험, 외화예금 등 외화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외화보험 시장이 발달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도 저금리 장기화, 내외금리차 확대, 자산분배 다양화 수요 등이 시장발달의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이들은 판매과정 중 발생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규제 개선과 업계의 자율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 왔다. 국내에서도 외화보험이 소비자들의 투자수익률을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의 문제점과 정책대응을 참고하여 우리 상황에 적합한 예방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감염병리스크 기업보장프로그램 논의와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3호

감염병리스크는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손해를 초래하고, 타 재난과 달리 세계 재보험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투자자의 자본을 동 리스크 인수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사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지난 1년간 미국·유럽은 미래 감염병리스크에 대비하여 다양한 공·사협력 기업보장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대부분 각국의 기존 재난보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면서 감염병리스크의 속성을 반영하되, 정부의 위험 보유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여 기업보장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추이와 시사점: 코로나19의 잠재위험 요인

김동겸(연구위원)·정인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3호(구 KIRI 고령화리뷰(포커스) 제36호)

정신질환에 따른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꾸준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환자 수는 5.2%, 진료비는 10.3%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건강상태 염려, 경제상황 악화 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타 진료과목의 의료이용량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정신질환 진료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생애주기별 다빈도 정신질환 발병을 고려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간 부문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

김규동(연구위원)·김윤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4호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보험회사의 혁신(sustaining innovation)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의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해야 하는데, 최근 보험시장은 균형 발전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품설계/개발부터 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관리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업모델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한상용(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6호

드론은 차세대 모빌리티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고 국내 드론산업은 정부 중심의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고성장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드론에 대한 기체등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내 드론보험은 보험료가 높은 수준이며, 높은 자기부담금에 비해 보상한도액을 제한하여 보험계약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큰 실정이다. 향후 드론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비사업용 드론사고에 대한 보험제도 활용, 보험요율 산출기반 조성,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 경제성장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7호

코로나19 충격 발생 이후 국가별로 누적 확진자 규모, 경제 성장률 등에 있어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누적 확진자 규모와 정치 체제 간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누적 확진자 규모와 경제 성장률 간에는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며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입은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 하락 정도가 낮았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 등이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R&D 투자 확대, 신성장산업 지원 등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팬데믹 채권 실패 사례와 시사점

김규동(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7호

세계은행은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한 재난적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7년 팬데믹 긴급자금 조달기구(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 PEF)를 통해 팬데믹 채권(pandemic bond)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과 2020년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팬데믹 채권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재난적 감염병은 예측이 어렵고, 보장 비용이 비싸며, 리스크 풀링(pooling)이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 영역에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난적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과 주요국 주택가격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8호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부분 국가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와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첫째 경기 침체의 원인이 다르고, 둘째, 전례 없는 재정 및 통화정책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택수요가 줄지 않았으며, 셋째,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됨에 따라 향후 주요국 주택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증가세가 확대된 가계대출의 경우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and 보험회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박희우(연구위원)·박은빈(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8호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국내대체투자 확대 방안으로써 뉴딜펀드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보험회사의 뉴딜펀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금공급 확대를 제약할 수 있는 감독규제 일부를 완화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는 저위험·저수익의 투자처로써 뉴딜펀드 참여를 검토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뉴딜펀드 투자 참여를 위해서는 수익성·사업성 위주의 펀드 운용, 지급여력 부담 완화, 다양한 인프라 투자처 발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충격과 재정위기 데자뷰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9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늘어난 정부부채로 인해 남유럽 국가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방만한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관리, 경직적인 재정구조, 독자적인 환율정책 부재 등이었다.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9년까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정히 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위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늘어난 정부부채가 재정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리 상승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와 고려사항

정원석(연구위원)·김윤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19호

적절한 운용지시가 되지 않는 퇴직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퇴직연금자산을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이라 함)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통한 실적배당형 상품위주의 자산운용이 이루어질 경우 더 높은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다는 기대와 변동성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 도입 시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객안내가 필요하며 디폴트옵션에 원금보장형을 추가하여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 과제

이태열(선임연구위원)·정원석(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0호

우리나라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제상 특징은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수령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사실상 납입 원금의 상당부분에 대해서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라는 틀을 유지해야 한다면, 수령단계의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KIRI 리포트

공·사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사례와 시사점

손재희(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0호

보건의료 데이터 집적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산업 내 공유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핀란드, 대만 등은 이미 보건의료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국가 자산화 전략을 구축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험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위험 인수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은 우선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정보 보유자 구제방안 등 구체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전후 보험료 변화

전용식(선임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1호

영국은 2012년 제도 개선 이후 대인배상 청구 건수가 줄어들며 자동차 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되었고, 위플래쉬 개혁(Whiplash Reform)이 시작되면 보험료 인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대인배상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 효과는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자동차 보험료 안정을 위해서는 대인배상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픈API 기반의 금융생태계 변화와 시사점

노현주(연구위원)·손재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1호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결제 인프라 개방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오픈 API 기반 개방형 금융생태계로의 변화는 비금융사업자가 금융서비스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시장경쟁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산업도 디지털 전환과 함께 플랫폼 경쟁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개방형 금융생태계 변화에 보다 면밀한 준비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금리 상승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노건엽(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2호

국고채 금리는 2020년 7월 이후 미국채 금리 상승 동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대폭 상승하였다. 금리 상승은 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건전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익성은 금리부 자산의 투자이익이 증가하고 저축성 보험수요 증가로 성장성에는 긍정적이거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금리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익의 내부 유보 등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RBC 비율 하락을 방어하면서 재무건전성 제도(K-ICS, IFRS17)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불평등과 빚투, 금융위기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3호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위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 악화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대출수요를 늘리는데, 이러한 욕구가 포퓰리즘 정책과 결합되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주택가격 거품이 유발되어 금융위기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위기는 경제적 불평등과는 무관하며 금리 변동에 따른 신용 사이클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적 불평등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양 주장 모두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외의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과 시사점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3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영업 제약으로 디지털 모집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일본과 홍콩 등 해외에서도 도입 초기단계로 시범운영 또는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다. 이들 사례를 통해 볼 때 화상모집은 모집성격에 대한 정의에 따라 규제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화상모집이 허용될 경우, Digital Native 세대로의 고객층 이동, 시간 및 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이점 등을 고려해볼 때 대면채널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화상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KIRI 리포트

코로나19 이후 소비성향 하락에 대한 논의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4호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하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내수 회복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의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추이는 60세 이상과 50대 가구 등 상대적으로 고령층 가구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내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득보조 못지않게 소비성향의 회복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밀레니얼세대의 은퇴준비

변해원(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4호

20·30대는 자산축적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 자산 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밀레니얼세대가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채관리, 위험분산 측면에서 자산관리 전략을 점검해야 하는데, 금리나 자산가격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지나친 부채는 피하고, 은퇴준비를 위한 자산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해야 하며, 저축여력 확보를 위해 소비습관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또한, 은퇴시점을 늦추거나,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노년기 의료비용을 경감시키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5호

법인보험대리점(GA)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해왔으며, 최근 모집조직의 대형화 및 매출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GA 채널은 도입 시 기대하였던 소비자효용 증대 효과보다는 보험회사 간 외형경쟁, 판매자의 수수료 편향, 판매자책임법제 부재 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회사와 GA의 내부통제시스템 재정비, 대리점 수수료체계 및 환수규정 정비, 지속적 고객경험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GA 사업모형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5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반영된 계약 건당 대인배상 보험금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대인배상 청구율, 사고 건당 보험금을 비교하였다. 대인배상 청구율 비교 결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가 영국, 일본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 건당 대인 보험금 규모는 작지만 증가율이 높고 계약 건당 보험금이 영국, 일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도덕적 해이 심화는 불필요한 금전적 비용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훼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사회적 공감대 마련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차이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6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보면 한국은행이 연준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기준금리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보면 연준이 한국은행에 비해 실업률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국 중앙은행의 차별적 모습은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준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며, 한국은행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민영 건강보험의 청구전산화 사례와 시사점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6호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자적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영국 등 해외의 민영 건강보험에서 청구전산화 사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전자)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금 청구자(보험가입자, 의료기관)과 보험금 지급자(보험회사) 간의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고, 연간 청구 건도 1억 건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손보험의 청구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사업모형 전환: IoT 기반 위험예방서비스

황인창(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7호

IoT(또는 데이터) 기반 위험예방서비스는 보험회사의 기존 사업모형 효율화 및 신시장 개척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oT 기반 위험예방서비스는 크게 ① 실시간 위험완화와 ② 장기간에 걸친 안전한 행동유도로 나눌 수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보험회사는 IoT 기반 위험예방서비스를 개발하여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사업모형 전환의 기회를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IoT 기반 위험예방서비스의 경제적·사회적 기여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험회사의 위험예방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IFRS17 시행 시 주주배당가능이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영현(연구위원)·노건엽(연구위원)·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8호

상법상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은 현행 회계(IFRS4)에서 금리 변동에 의한 실질적 자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보험회사 배당의 적절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향후 IFRS17이 시행되더라도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 금지'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자산을 보험부채의 듀레이션 및 현금흐름에 매칭하여 운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 위험회피 파생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변화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8호

보험산업 관련 활동성 지표 중 교통량과 의료이용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소효과가 2021년 둔화되고 있으나, 개인 이동량은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 초기 급감한 수준에서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손해를 개선은 재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면 영업채널의 영업환경 악화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반사효과로 나타난 수익성 개선은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면영업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출산 및 혼인의 추이 변화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29호

출생아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7년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다가 2020년 10월, 11월에 일시적으로 큰 폭 하락한 후 기존 추세로 회귀하는 추이를 보인다. 혼인 건수 증가율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감소율을 유지하다가 2020년 4월, 5월에 큰 폭 하락한 이후 2021년 초까지 약 1년 동안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따라서 혼인의 경우 출산의 경우보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하반기 코로나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환경의 악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와 보험산업

조영현(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1호

메타버스는 물리적·지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판매·마케팅, 협업·소통, 훈련 등의 분야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보험회사는 고객 점점 확장과 고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해외 보험산업에서는 국내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가 발견되는데, 국내 보험회사도 ① 스타트업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 보장, ② 제공하는 헬스케어 앱의 업그레이드 및 보험상품과 연계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인배상 I 보험금 한도조정과 과잉진료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1호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해 수준 판단과 그에 부합하는 진료비를 고려한 대인배상 I 부상 보험금 한도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대인배상 I 보험금 한도조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잉진료 가능성이 한도가 상향된 상해등급 12급에서 한도가 하향된 상해등급 14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서는 경상환자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비를 고려한 보험금 한도조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 차이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2호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자료를 근거로 소득계층별 물가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주거비, 식료품, 교통, 교육, 보건 관련 항목에서 소득계층별로 가중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계층별 물가가중치가 큰 5개 항목들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식료품·비주류음료' 항목의 물가상승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산출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뿐 아니라 물가 등 소비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사회 다양성 추구하고 금융회사 시사점

한상용(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2호

최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이사회 다양성을 위해 여성 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상장기업에 대해 1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향후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확대가 단순히 여성 이사의 수적 증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질적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윤성훈(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3호

가계부채 조정을 경험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모두에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에 몇 가지 공통된 현상이 발견된다. 가계부채가 조정된 국가의 경우 가계부채 조정보다 금리 상승에 의해 주택가격 하락이 먼저 시작되었다. 가계부채 조정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이렇다 할 주택가격 조정도 없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연착륙은 금융정책만으로는 어려우며 주택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즉, 주택가격이 주택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 가계부채도 주택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

사이버사고의 진화와 사이버보험 시장 동향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3호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초연결사회 진입과 함께 사이버공격의 접점이 증가한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공격은 공격자, 표적, 피해양상 등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사이버공격의 빈도 및 심도 증가와 기업의 사이버 관련 규제리스크 증가에 따라, 사이버보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사이버사고의 진화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이버리스크의 양적·질적 변화로 인해 동 리스크에 대한 보험 공급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의 사이버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보험산업 인적자원 고도화 방향

임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4호

보험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① 인구구조 변화, ② 디지털화, ③ 위협의 진화 등 3가지 환경변화 측면에서 인적자원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1인 고령자 가구와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신탁 전문가를 육성한다. 둘째, 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적 역량과 함께 보험산업 관련 비즈니스 지식도 겸비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한다. 셋째, 새로운 위협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해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위협을 예측할 수 있는 공학이나 자연과학 기반의 위협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주요국 정부의 사이버보험 공급 지원 동향 및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4호

사이버사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은 주로 사전적 보안강화에 집중해 왔으나, 사이버사고의 경우 방어보다는 공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사후적 피해회복에 대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주요국에서는 사후적 피해회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보험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정부가 일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보험 및 유동성을 제공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이버보험 공급을 위해 데이터 공유·리스크 모델링·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사후적 피해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가상자산과 보험산업

황인창(연구위원)·장윤미(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5호

가상자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반감으로 개발되어,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정부·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디지털형태로 발행하여 중개기관 없이 지급이체가 가능한 P2P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불수단과 구분된다. 해외 보험산업은 보장제공, 투자수단, 지급수단, 스마트계약 활용을 위해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활용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신사업 발굴, 대체투자처 모색, 사업모형 혁신 측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채널 보험 가입자 상품·연령별 특성 분석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5호

온라인채널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의 소비자가 보험료가 낮은 보험에 가입하며 성장하였으며, 간단한 구조의 보장성보험 혹은 저축성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에 대해서만 온라인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험회사의 온라인채널 판매 비중은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고 이를 빠르게 확대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소비자가 이에 익숙해지며 온라인채널은 지속하여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상품별로 소비자 연령층에 따라 맞춤형 온라인판매 전략을 구상하여 온라인채널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노건엽(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6호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2021년 6월에 도입하였으나, 최근까지 설립 허가를 신청한 기업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액단기 보험업이 활성화된 일본은 자본금 요건 외에 상품심사, 외부감사, 지급여력제도, 계약자 보호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국내도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입 요건뿐만 아니라,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진입 이후 운영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자동차보험에 미친 영향 분석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536호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위축으로 자동차 운행과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며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은 과거 3년 평균보다 낮아졌고 이로 인해 손해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에는 코로나19 초기와 다르게 차량 운행 빈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사고 건당 보험금 증가 추세는 인플레이션, 실업률 상승 등으로 대인 및 대물배상에서 모두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 확대로 당분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상승 추세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증 현황과 보험산업의 역할

장윤미(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1호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우울증은 자살, 치매,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높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보험회사는 우울증 보장 상품 출시와 자살 예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우울증 예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채권 재분류 현황과 시사점

노건엽(연구위원)·이연지(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1호

보험회사는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외에 채권 재분류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보험회사의 채권 재분류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는 24개사 중 13개사가, 손해보험사는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는 15개사 중 6개사가 재분류를 하였다. 채권 재분류는 현행 제도에서만 유용한 방안이므로 이익의 내부 유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근본적인 자본 확충 방안이 요구된다.

AI 리스크와 전용보험의 필요성

김윤진(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2호

AI 오작동·오류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AI 리스크 대응을 위한 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사이버 보험은 AI 결함으로 인한 신체 상해, 브랜드 훼손, 물적 손실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AI 리스크에 특화된 AI 전용보험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다양한 분야에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보험사 자체적인 AI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위성보험 현황과 시사점

최원(수석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3호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로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발사 계획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아직까지 국내 보험산업에서 위성보험의 비중은 미미하나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고 향후 우주산업의 성장성 또한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위험 인수능력 강화 등과 같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톤틴형 연금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 우려와 기회

김윤진(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3호(구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9호)

‘톤틴형 연금’ 도입 시 보험산업 우려 사항과 기회 요소를 검토하였다. 우려 사항은, 소비자가 톤틴형 연금의 환급금 및 보증지급 설계에 따른 리스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불안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톤틴형 연금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초고령사회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고 장수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 간병연계 연금보험 사례와 시사점

장철(연구위원)·권오경(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3호(구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9호)

우리나라 장기간병보험은 보험 보장 형태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장기간병서비스 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연금을, 미국은 거치형 장기요양특약을 연금에 부가한 장기요양연금을, 독일은 세부 분류된 보험급여 내용을 바탕으로 현금과 현금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령층에 알맞은 장기간병보험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 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자 간 협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해외 공적연금 개혁동향과 시사점

최장훈(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3호(구 KIRI 고령화리뷰(이슈 분석) 제39호)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연금 개혁이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개혁으로 인한 노후소득 감소가 발생하여 급여성정성 회복을 위해 개혁역전이 일어났다. 국내에서도 연금의 급여성정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보장체계의 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의 효과적 운영과 사적연금 강화를 통한 급여성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출생아 30만 명의 의미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4호

국민총소득 1조 달러 이상인 주요 16개국 중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이 3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도 연 30만 명 대의 출생아가 태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규모가 30만 명 또는 그 이하라는 것은 이들 국가들보다도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ESG 경영 확대의 필요성

이승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4호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경영의 목적이 이해관계자 중심의 가치 제고로 전환되면서 보험회사의 ESG 경영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실행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정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ESG 경영은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험산업은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노건엽(연구위원)·이연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5호

생명보험회사는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에 다양한 최저보증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 심화에 따라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확대에 따른 손익 변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증의 적절성 분석, 자산운용 성과와의 연계, 위험 관리 전략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5호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제도정비, 전문직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확대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사회재난 증가로 재난안전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의 배상책임보험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여행보험시장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5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상과 연계된 '생활 여행'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면서, 국내 여행보험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여행보험시장도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보장 수요에 대응한 신상품 출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보험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민·관 파트너십 및 여행산업·보험산업의 협력을 통해, 'WITH 코로나19 여행 수요'를 반영한 상품개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설계사 소득변화 특징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6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대면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가운데, 대면영업에 기반을 둔 보험설계사도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다. 향후 보험산업은 대면영업 제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비대면 규제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보험상품 리모델링과 소비자보호

김석영(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6호

최근 보험계약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계약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 구성으로 재조정하는 보험상품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상품 리모델링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계약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리모델링으로 보험소비자 혜택이 향상되어 보험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과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의료비 증가의 거시경제학적 분석과 시사점

임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7호

Baumol(1967)은 이론 모형을 통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OECD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은 대부분 Baumol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효과의 규모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Baumol 이론이 타당성을 가진다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완화 정책과 함께 의료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은퇴준비 인식제고 사례

변해원(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7호

현재 우리나라에는 예상연금액 조회나 노후준비자금 설계서비스 등 유용한 은퇴저축설계 도구들은 많지만, 노후준비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구체적 노후생활상을 묘사하고 필요정보를 기억하기 쉽게 제공하는 영국 은퇴생활수준 사이트나 단순계산법 제공 사례는 은퇴저축에 대한 관심 환기와 노후준비 동기유발을 위해 필요 은퇴생활비나 단순계산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 보험회사의 마이크로인슈어런스 활용 사례 및 시사점

김윤진(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8호

해외 보험회사들은 해외(신흥국) 진출 및 ESG 경영에 마이크로인슈어런스를 성공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 디지털 판매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사와 협업하거나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보험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이크로인슈어런스의 활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망률 개선과 연금상품 다양화

김세중(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8호

고연령 사망률 개선은 종신연금의 상호부조 효과를 약화시켜 장수하는 가입자의 혜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장수리스크 관리수단으로서 은퇴시점에 개시하는 종신연금의 가치가 하락함을 의미한다. 고연령 사망률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보험회사는 장수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해외 헬스케어 서비스와 시사점

김석영(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9호

해외 주요국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각국의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일본과 유사한 수요를 감안하여 간병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건강 관련 데이터 활용 확대, 의료법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환경하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소비 유형 특성별 회복 가능성 논의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19호

2021년 우리나라 경기는 수출 회복과 함께 산업 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의 회복 여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0년 3월 이후 민간 소비는 재택 시간의 증가와 정부의 부양책 등에 따라 내구재에 의존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구재 소비는 지속 증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 비내구재 등 다른 유형의 소비에서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미국, 장기요양보험 리스크관리 실패와 시사점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0호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장기요양보험시장이 급성장 하였으나, 가격산정 오류로 제도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업계와 감독당국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미국 LTC 보험 시장 경험에 비추어볼 때, 국내 보험회사들도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된 가격산정 오류와 느슨한 언더라이팅 발생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특징과 시사점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0호

우리나라는 의료비 증가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공적 건강보험은 운영·재정이 중앙 집중되어 있으나 보장성은 낮은 수준이고, 의료 공급의 민간 재원 의존도는 높지만 부적절한 비급여 공급에 대한 통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과적인 의료비용 통제 정책 수립을 통한 건강보험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 디지털전환

변혜원(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1호

금융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디지털소외는 금융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디지털소외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기구나 금융앱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디지털화로 인한 고령자 금융소외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면 지점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환경(UI) 개선과 고령자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한 효과적 교육이 필요하다.

주요 물가 지표를 통해 본 물가 불안 장기화 가능성 논의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1호

주요 물가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볼 때, 첫째, 물가 상승세가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둘째, 집세나 공공 부문의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되어 상당 기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가 불안은 실질구매력뿐 아니라 금리상승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RI 리포트

대출형 사모펀드시장 현황과 시사점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2호

대출형 사모펀드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출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보험회사는 대출형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현금흐름, 수익률 제고, 금리 리스크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투자 수단 다양화의 방안으로써 대출형 사모펀드를 검토해볼 수 있다.

팬데믹에 의한 경기침체와 경영자 보상

한상용(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2호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적 충격이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에 따라 글로벌 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경영자 보상체계를 변경하거나 이에 대해 고려해 왔다. 그러나 경영자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보상 축소는 경영자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기업들은 외부충격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의 동태적 효율성 제고 방안

임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3호

지난 10년간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회사의 진입과 퇴출이 거의 없었고, 그룹의 조직형태에 있어서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을 평가해 보면, 조직의 다양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방안으로는 1社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계약이전제도 정비를 포함한 퇴출제도 개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변액보험 해지율 상승과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김유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4호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변액저축성보험 월별 해지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 이는 주식 직접투자를 위한 자금 이동, 수익 확정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액저축성보험은 장기 보장수단에 가깝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른 해지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 가입자의 장기유지를 위해 수익률 개선 등 서비스를 강화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백내장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정성희(연구위원)·문혜정(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5호

최근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2021년에는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내장수술과 관련된 규정 변화에 따라 청구 항목과 금액이 임의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확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이므로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한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 보험업계의 장애인 고용과 시사점

한상용(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6호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사회공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현재 해외 주요국 보험업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영활동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통해 기업가치 증대와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내 보험회사들도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장기 주식 투자 활성화 방안

노건엽(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진옥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7호

보험회사는 자본건전성 제도 강화에 따라 주식을 통한 실물경제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 보험산업은 Solvency II에서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완화를 통해 주식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장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 완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7호

보험회사는 자본건전성 제도 강화에 따라 주식을 통한 실물경제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 보험산업은 Solvency II에서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완화를 통해 주식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보험산업의 장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 완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재보험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

임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8호

국내 재보험산업은 자본력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해 재보험 해외 수치차에서 지속적으로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보험산업 발전전략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특화 재보험회사를 육성하는 히든챔피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로벌 특화 재보험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진입규제 완화정책뿐만 아니라 인력정책을 포함한 산업정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손해보험 성장 요인과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최원(수석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29호

최근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손해보험이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4차 산업 관련 신규 리스크 확대, 리스크 관리 서비스 등의 새로운 사업 모형이 일반손해보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손해보험이 손해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와 신규위험 발굴 및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 현황과 시사점

손재희(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0호

온라인·모바일 쇼핑플랫폼을 통한 보험 선물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MZ세대 소비방식 및 모바일 중심의 생태계에 보험 접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서비스 출시를 기점으로 향후 다양한 모바일 기반 보험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나, 향후 불완전판매 방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개인 위험의 속성 변화와 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김혜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0호

우리 사회가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물리적 위험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안전 항목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우울증,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인지능력 장애 등 개인의 정신적 위험은 확대되고 있다. 보험산업은 전통적인 보장 영역인 물리적 위험의 축소와 함께 정신적 위험의 확대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보장 니즈 변화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IRP 시장 성장과 보험회사의 역할

정원석(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0호

최근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진 금융투자 권역으로 IRP 적립금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IRP는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므로 금융회사의 운용 능력이 투자수익률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금융권역별 수익률의 차이는 실적배당형 투자 비율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 및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및 IRP 적립금 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1호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고령층의 신규가입 확대와 보유계약 중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령소비자의 민원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급과 함께 고령자의 합리적인 보험가입 의사결정 지원, 보유계약 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회사 개인보험 상품 집중도 변화

김세중(연구위원)·김윤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2호

생명보험회사별 상품전략의 차별화는 지난 10년간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개인보험시장의 저성장 국면 및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각 보험회사가 성장성 제고를 위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품차별화 전략은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환경하에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시사점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3호

독일에서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2000년대 초 단행한 공적연금개혁을 통해 도입된 사적연금제도의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독일의 경험에 드러나듯이 민영부문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제도운영의 투명성이나 민영보험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KIRI 리포트

COP26의 정책합의와 보험산업의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4호

UN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를 마치며 발표된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참가국의 진전된 의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중심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도 위험인수와 자산운용 등 경영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환경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주여행보험의 성장 및 보편화 가능성

손민숙(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4호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우주여행에 대한 잠재 가능성 및 미래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우주여행 티켓 가격이 과도하고, 보장대상과 상품 구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고 자동차 또는 비행기와 유사하게 대중화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 새로운 보험 니즈가 나타날 수 있으며, 보험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운용 및 활용의 중요성

정원석(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5호

고령화 대응 노후소득원 마련책으로 퇴직연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위소득 수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30년간 가입할 경우 투자수익률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46만 원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여 국민연금과 합산할 경우 은퇴 이후 필요소득에 근접한 노후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방지,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한 가입자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

조건부자본증권을 이용한 보험회사 자본관리

노건엽(연구위원)·조영현(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 분석) 제535호

은행이나 유럽 보험회사는 손실흡수능력이 강화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관리한다. 우리나라도 2023년 시행될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하고 발행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은 보험회사에게 양질의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안이 K-ICS 도입 이전에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 요건과 감염병에 관한 소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9호

최근 코로나19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와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는 보호범위가 다를 수 있고, 손해보험 약관상 코로나19 감염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라 판시하였다. 일상적 침입경로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면역력 등 내재적 요인에 의해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상해의 요건인 외래성 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아직 판례로 확립된 것은 아닌 바, 다양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해의 판단기준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2020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9호

(i) (2017다215728) 직원의 동의 없이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단체규약상 수익자가 회사로 명시되어야 한다. (ii) (2019다204869)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수익자나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은 유효하다. (iii) (2019다290129)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은 직업, 재산상태, 계약체결 경위 등 제반사정에 기하여 이를 추인할 수 있다. (iv) (2018다276799) 가해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한 고의는 없는 경우 고의사고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향후 과제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0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이 제정되었는 바, 보험업법과 비교하여 적용범위가 확대되거나 내용적으로 추가·강화, 변경되는 규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 초기에 명확성이나 규제 타당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법령해석 등으로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바, 업계는 영업과 민원처리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KIRI 보험법리뷰

독일 무인자율주행차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1호

독일의 무인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의무보험법 개정안(이하, '무인자율주행차법'이라 함)이 2021년 5월 28일 연방 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무인자율주행차법은 (i) 무인자율주행차 운행 허가 요건, (ii) 관련 당사자들의 의무 및 (iii) 자율주행 관련 필수 데이터의 기록 및 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무인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무인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기존의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험중개사 조항 신설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1호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있는데, 현행 상법상 모집종사자의 권한에 대한 조항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보험중개사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법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다. 상법상 보험중개사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중개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인지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중개사를 포함한 모집종사자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非物件化)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2호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배경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동물보험을 제3보험에 포섭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동물을 비물건화(非物件化)하더라도 권리의 주체인 인간과는 다르므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가시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물 관련 손해배상책임 범위 확대 등 해석상 변화로 보험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동물과 인간이 구분되는 이상 인보험인 제3보험에 동물보험을 포섭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고가차 대물배상의 쟁점과 고려사항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2호

고가차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 및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i) 고가차 대물배상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ii) 대물배상도 자차보험처럼 차량 가격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① 손해배상의 원칙과 예외, ② 보험료 인상 방법론의 적합성 및 타당성, ③ 관련 산업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고가차 대물배상에 관해서는 자차보험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즉시연금보험 관련 최근 판결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3호

즉시연금보험 관련하여 제기된 1심 소송들에서 대부분 보험회사가 패소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험회사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산출방법서가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본 기존 판결들과는 달리, 최근 판결에서는 산출방법서상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 보험약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존 판결들에서는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된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의 개요와 전망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3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를 편향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를 채택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지나치게 엄격한 독립성 요건 및 수익구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소비자의 변화하는 니즈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시행 이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향후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2021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I)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14호

(i) (2017다281367)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ii) (2018다257958) 보험회사도 일반적인 확인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ii) (2019다277812)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신속한 권리관계 확정의 필요성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3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에 대한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9호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압보험 상품에서 담보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향후의 암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거나 명확한 사항이 아니어서, 개별 사안에서 환자의 상태, 입원 치료의 필요성, 치료 내용 및 방법, 의사 소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 위플래쉬 개혁의 시행 및 시사점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0호

코로나19로 시행이 유예되었던 영국 위플래쉬 개혁이 2021년 5월 3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i) 위플래쉬 부상에 대한 정액 배상 기준 최종안이 마련되어 곧 확정될 예정이고, (ii) 교통사고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iii) 소액사건 보상금 청구 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포털사이트도 5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해지의 편의성 제고와 고려사항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0호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임이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확인될 때에는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보험계약자 편의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면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인다. 한편, 보험계약 해지 절차에서 보험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보험설계사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법률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0호

보험설계사 등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이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최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정부당국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KIRI 보험법리뷰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 주요 내용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1호

금융당국은 최근 대면모집채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화 모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TM모집채널에서는 AI 음성봇을 활용한 중요사항 설명 및 전화와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방식을 허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채널 간 융합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승환계약 규제 범위에 대한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2호

보험업법상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계약'의 범위를 실제로 담보하는 위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소멸'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감독당국의 지침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In-bound 유입 계약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승환계약 시 부활 청구에 대한 검토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2호

보험계약자가 소멸된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함에 있어서 고지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부당 승환계약의 부활 절차에 있어서는 고지의무 이행이 필요 없음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계약 소멸 전에도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보험가입내역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경우 타사 승환건에도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영국 테스트케이스 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황현아(연구위원)·손민숙(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3호

영국에서는 코로나19가 기업휴지보험 보상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테스트 케이스 절차가 진행되어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원칙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활용도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유사한 금융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바, 영국 테스트케이스 제도의 내용 및 운영 현황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3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법안에 따라, 입점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다양한 표시·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의되어 있는 다양한 법안들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4호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i) 재난 피해 관련 대출원금 감면 등 금융지원 명령권 도입, (ii)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iii) 금융교육 강화, (iv)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처분 권한 분장, (iv) 금융상품 방문·전화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내용으로 총 5건 발의되었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논의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2021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백영화(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이슈 분석) 제14호

2021년에 총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중에서 비대면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되었다. 나머지 14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의료 보험 연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등이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장 역할

정성희(연구위원)

제2021-1호

지난해 실손보험은 2조 4,313억 원의 역대 최고 손실을 기록했고, 손실을 견디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속적인 손해를 상수는 실손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실손가입자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를 악화 현상을 보험산업 측면과 총의료비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과 효과

정성희(연구위원)

제2021-2호

이번 상품구조개편은 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②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운영, ③ 자기부담금 상향, ④ 5년으로 재가입주기 단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손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개편에 따라 내년 7월에 출시 예정인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과 보장범위와 한도는 유사하면서도 보험료 수준은 기존 상품보다 10~70%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기 쉬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IFRS17

노건엽(연구위원)

제2021-3호

보험계약의 국제적인 회계기준인 IFRS17이 2023년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 회계기준(IFRS4)과 다른 IFRS17 특징은 “보험부채 평가”와 “수익/비용 인식”이다. 시가기준 보험부채 평가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이해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논의한다. 또한 상품별 예시를 통해 보험계약 수익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현행과 다른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을 살펴보았다.

전동 킥보드,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황현아(연구위원)

제2021-4호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속 25km 이하, 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운전면허 필요 여부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어 기존 규제에 편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먼저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동 킷보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해야 할까?

황현아(연구위원)

제2021-5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전동킷보드도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시험운행을 실시하며 전동킷보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동킷보드 운전자 및 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험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전동킷보드도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드론 리스크관리의 현황과 과제

한상용(연구위원)

제2021-6호

최근 정부는 드론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기체등록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무화 대상이 아닌 담보와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가입은 현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드론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드론 사고의 피해자보호와 구제를 위한 재무적 수단으로 드론 보험을 활성화하여 드론 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알기 쉬운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

노건엽(연구위원)

제2021-7호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인 K-ICS는 해외 자본규제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K-ICS의 주요 특징으로 첫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완전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둘째,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 평가가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충격시나리오 방식이 도입되어 위험 측정방식이 정교화 되었다는 것이 현행 제도와 차별화된 부분이다.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현황과 특징

박희우(연구위원)

제2021-8호

보험회사는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수익률 제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장기투자 등의 수요로 인해 대체투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부 대체투자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대체투자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현황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대체투자의 정의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KIRI 영상자료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세제

정원석(연구위원)

제2021-9호

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기에는 중산층이었던 가구의 절반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노인층이 젊은 시절 근로기에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노후소득원 준비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재난보험 공사협력의 배경 및 모형

송윤아(연구위원)

제2021-10호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대재해리스크와 가계 또는 기업의 보장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한다. 사이버 테러리즘의 위협도 고조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재난보험시장 참여가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형평성을 고려한 재난보험 공사협력 모형이 검토되기를 기대해본다.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진출 배경과 영향

황인창(연구위원)

제2021-11호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 간 융합을 바탕으로 이중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서도 빅테크라 불리는 거대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빅테크 특징 및 금융업 진출 동인에 대해 알아보고,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베트남 손해보험시장 현황 및 특징

조용운(연구위원)

제2021-12호

베트남 손해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잠재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에 진출할 경우 베트남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보험제도가 자주 바뀌고 있어 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 전문인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I

2021년 대외활동

- Chapter 01 정책·경영세미나
- Chapter 02 산학세미나
- Chapter 03 포럼
- Chapter 0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Chapter 01

정책·경영세미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
-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 -
- 보험산업의 AI 적용 현황과 과제 -
-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
-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
- Next Insurance -
-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 보험산업의 미래 디지털 혁신 '인슈어테크' -
-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행사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토론회 |

주관행사

행사 개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이슈를 점검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직면한 이슈들과 해결 방안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미래 보험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었다.

- 일시 : 2021. 3. 5(금) 14:00~16: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F), YouTube 보험연구원
-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의 도전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기조발표 : 『보험산업의 미래와 대응』,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패널토론
 - 사회 : 장동한 (건국대학교 교수, 한국보험학회 회장)
 - 토론 :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민기식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 이문화 (삼성화재해상보험 전무),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욱 (금융감독원 국장)

주요 내용

코로나19 확대에 의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산업도 디지털화와 저성장·저금리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정체된 보험시장에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보험산업이 직면하는 환경 변화와 미래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후 비대면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의 채널운영, 인슈어테크 활용과 미래 디지털 보험산업 전망, 일반보험의 성장 등 보험업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 등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

행사명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 공청회 |
주관행사

행사 개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 방안은 보험금 누수 억제 및 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시 : 2021. 4. 22(목) 15:00~16:30
- 장소 : YouTube 보험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개 회 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축 사 :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주제발표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 방안』,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패널토론
 - 사회 :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
 - 토론 : 김기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 김오현 (연세대학교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주요 내용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사회적 불만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2013년 시행된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의 효과성 검토, 3주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 의무화, 그리고 경상환자 대인배상2 진료비 과실상계 방안이 제시되었다.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 기간인 3주를 초과하여 진료 받기를 원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고, 경상환자 대인배상2 진료비 과실상계 방안은 대인배

상1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진료비를 과실상계하고 과실상계로 부족한 진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 방안은 보험금 누수 억제 및 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산업의 AI 적용 현황과 과제

행사명 『보험산업의 AI 적용 현황과 과제』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1 세미나 |
공동주관행사(금융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주관, 보험연구원 세미나 주관)

행사 개요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보험 가치 사슬에서 많은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에 다양한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결합되면서, 보험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AI의 국내외 적용 현황과 영향을 알아보고, 현재 보험환경에서 한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일시 : 2021. 5. 26(수) 10:00
- 장소 :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1 홈페이지
- 주제 :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
- 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 발표1 : 『AI와 보험 비즈니스 전망』, 이준섭 (한화생명보험 상무)
 - 발표2 : 『해외 보험산업 AI 적용 현황 및 주요 이슈』, 홍성호 (보험개발원 조사국제협력팀장)
 - 발표3 : 『보험산업의 AI 윤리문제와 윤리기준 제정 방안』,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토론
 - 사회 :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 토론 :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 강용성 (와이즈넷 대표), 정규완 (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주요 내용

보험산업의 AI 적용은 판매, 위험관리, 지급 및 보상, 고객 관리 등 보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를 통해 고객경험과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모델이 변화할 것이며, 보험회사는 금융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정성,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등에서 AI 윤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외 주요국가와 해외 보험감독기구들은 이미 윤리기준을 제정하거나 준비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윤리기준 제정을 준비 중인데, 보험산업의 건전성 유지와 시장 확대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행사명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공동연구포럼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공동주최)

행사 개요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회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AI 및 네트워크 오류에 의한 사고 책임과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일시 : 2021. 6. 15(화) 15:00~17:10
- 장소 : 서울대학교 수펙스홀(58동 1층), YouTube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주제 :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 발표 및 토론
 - 인사말 : 이유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주제발표
 - 발표1 :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이경수 (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2 :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위험의 배분』, 석승훈 (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3 : 『모빌리티 시대 보험 제도의 과제: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4 : 『자율주행차와 보험 가치 사슬의 변화』,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 패널토론
 - 사회 : 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일평 (삼성화재해상보험 상무), 노운선 (다리소프트 대표),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원)

주요 내용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자동차에 관한 통제권이 운전자에서 제조사로 이전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회사가 보험회사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AI 오류 및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사고 시 책임 귀속 문제,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모빌리티 보험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행사명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주최)

행사 개요

지급여력제도의 발전 방향을 ① 자본규제, ② 감독당국 점검, ③ 시장 규율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 자본 변동성에 적극 대비하고,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제도에 부합하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운영하도록 감독당국의 운영실태 점검 등이 필요하고 보험회사 특성을 고려한 내부모형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도록 보험회사의 보고 및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 일시 : 2021. 7. 13(화) 15:00~17:00
- 장소 : YouTube 보험연구원
- 주제 : 지급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 축 사 : 김근익 (금융감독원 원장 직무대행)
 - 발 표 :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 패널토론
 - 사회 :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원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이사), 박규서 (한국보험계리사회 리스크관리위원장), 조재훈 (영남대학교 교수), 최부규 (삼성화재해상보험 상무)

주요 내용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인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영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지만, 금리 변화에 따른 경제적 실질이 반영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채 시가평가 도입과 국제 지급여력제도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한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 준비와 지급여력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K-ICS 도입 관련 보험회사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Next Insurance

행사명 『Next Insurance』 하계연합학술대회 세션 VI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한국보험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한국연금학회·한국금융법학회
·한국보험법학·한국보험계리사회 공동주최)

행사 개요

- 일시 : 2021. 8. 20(금) 14:00~17:30
- 장소 : ZOOM 보험연구원
- 세션 VI 발표 및 토론
 - 사회 :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발표
 - 발표1 : 『보험산업과 ESG』,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2 : 『위험의 진화와 보험의 역할』,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3 : 『디지털 환경과 보험산업』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4 : 『인구구조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미래』,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제1주제) 최근 기업의 ESG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도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주된 역할 수행에 ESG 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2주제) 보험산업은 새로운 위험 수요 대응을 위해 디지털 활용·데이터 역량 강화, 파트너십 확대 및 공·사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인 위험 관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과 기업 경영의 위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이 요구된다.

(제3주제) 디지털 전환은 보험업 가치사슬을 자동화·정교화하고 보험서비스 제공방식 및 보험회사의 제공가치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환경을 성장기회로 만들기 위해 보험회사의 혁신과 투자, 규제 개선, 디지털 소외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제4주제) 고령화 심화라는 양적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등장,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양극화 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보험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은 이에 대응하여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행사명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2022년 보험산업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보험료 성장여건 개선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구조화된 저수익성과 불안정한 소비자 관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일시 : 2021. 10. 8(금) 10:00~11:10
- 장소 :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별관 LL층), YouTube 보험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발 표 : 『2022년 보험산업 전망』, 김세중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2022년 보험산업 과제』,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주요 내용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은 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 개인의 이동 및 활동 제약을 통해 보험산업에 예상 외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험산업의 보험료 성장성 확대 효과는 2021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반사효과가 점차 소멸하면서, 기저효과가 부각되고 보험산업의 우호적 환경요인도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보험산업은 경제 정상화에 따른 보험료 성장여건 개선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1.7%의 성장이 전망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인 4.9%의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보험산업은 구조화된 저수익성과 불안정한 소비자 관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장 혁신과 신뢰에 기초한 시장규율 정착에 주력해야 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시장 혁신, 본업역량 강화, 소비자 신뢰, ESG 경영”을 2022년 보험산업의 4대 과제로 제시한다.



보험산업의 미래 디지털 혁신 '인슈어테크'

행사명 『보험산업의 미래 디지털 혁신 '인슈어테크』 제14회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

행사 개요

보험산업 내 인슈어테크 동향 및 활용 사례와 디지털세대인 MZ세대의 보험소비 경험분석을 공유하여 인슈어테크와 함께하는 미래 보험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인슈어테크 활용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제시하고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021. 10. 14(목) 09:00~13:00,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발표 및 토론
 - 개 막 사 :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사장)
 - 환 영 사 :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 축 사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 기조강연 : 『인슈어테크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이안 그린(Ian Green, Dip PFS) MDRT협회 회장
 - 주제발표
 - 발표1 : 『진화하는 인슈어테크, 동향 및 전망』,
알렉산더 브론 (세인트 겔런 대학교 보험경제학 연구소장)
 - 발표2 : 『디지털 보험시대, MZ세대의 보험소비 경험분석』,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3 : 『보험산업 혁신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
서운석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장)
 - 패널토론
 - 사회 : 김재현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 패널 : 양해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 국장),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서운석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 실장), 정규식 (교보생명 오픈이노베이션 실장)

주요 내용



급격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보험산업 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인슈어테크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인슈어테크의 동향 및 실제 활용 사례와 미래 주소비층인 MZ세대의 보험소비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보험산업의 미래 발전 방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행사명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 | 공동주관행사(보험연구원·서울대학교·한국건강학회 공동주최)

행사 개요

앞으로 다가올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사 간 상생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 : 2021. 10. 29(금) 14:0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101동 201호), YouTube 건강금융연구센터
- 주제 :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 발표 및 토론
 - 개회사 : 김영식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 축 사 : 윤영호 (한국건강학회 이사장)
 - 발 표 :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 패널토론
 - 사회 :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 권정현 (KDI 연구위원),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박상민 (서울대학교 교수), 변진옥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장성인 (연세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보완적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성과 민영건강보험의 보완적인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사 건강보험의 발전적인 관계 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사 간 상생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Chapter 02

산학세미나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계리사의 역할 -
- 디지털 전환과 피보험자 본인확인 -
- 디폴트옵션 도입 및 운영방안 -
- 중소기업 기금형제도 운영방안 -
- AI 자산관리와 보험 -
- 국내 일반보험시장 현황 및 이슈 -
- 보험회사 대체투자 현황 및 이슈 -
- 재난보험 공사협력 모델 및 이슈 -
- 보험모집시장 현황과 이슈 (I) -
- 보험모집시장 현황과 이슈 (II)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계리사의 역할

행사명 : 제13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1. 29(금) 11:30~13:00, ZOOM 보험연구원(화상 세미나)
- 주제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계리사의 역할
- 발표 : 이창욱 (금융감독원 국장)

주요 내용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확대와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등 국내 보험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계리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특히 선임계리사의 전문성 및 지위 강화를 위해 제도 교육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디지털전환과 피보험자 본인확인

행사명 : 제14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3. 26(금) 11:00~12:40, ZOOM 보험연구원(화상 세미나)
- 주제 : 디지털전환과 피보험자 본인확인
- 발표 : 김정우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마케팅 팀장)

주요 내용

디지털전환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보험계약체결의 비대면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계약 진행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비대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본인확인을 둘러싼 이슈를 확인하고 논의하였다.

디폴트옵션 도입 및 운영방안

행사명 : 제15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3. 31(수) 10:00~12: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디폴트옵션 도입 및 운영방안
- 발표 :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최근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상황에 적합한 디폴트옵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디폴트옵션 관련 이슈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중소기업 기금형제도 운영방안

행사명 : 제16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4. 14(수) 10:00~12:00, 보험개발원 대회의실(9F)
- 주제 : 중소기업 기금형제도 운영방안
- 발표 :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주요 내용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안정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I 자산관리와 보험

행사명 : 제17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4. 30(금) 11:30~13:00, ZOOM 보험연구원(화상 세미나)
- 주제 : AI 자산관리와 보험
- 발표 : 이용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주요 내용

최근 AI를 기반으로 자산관리를 해주는 핀테크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AI 자산관리의 수준과 향후 발전 속도를 점검하고 향후 시장전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내 일반보험시장 현황 및 이슈

행사명 : 제18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5. 27(목) 14:00~15:30, ZOOM 보험연구원(화상 세미나)
- 주제 : 국내 일반보험시장 현황 및 이슈
- 발표 : 김혜성 (경영학 박사)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일반보험시장은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이슈로 국내 일반보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일반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시장성장에 필요한 노력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보험회사 대체투자 현황 및 이슈

행사명 : 제19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6. 25(금) 14:00~15:30, ZOOM 보험연구원(화상 세미나)
- 주제 : 보험회사 대체투자 현황 및 이슈
- 발표 :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저금리 장기화에 대응해 보험업계는 대체투자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재난보험 공사협력 모델 및 이슈

행사명 : 제20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8. 27(금) 14:00~15:30, ZOOM 보험연구원(화상 세미나)
- 주제 : 재난보험 공사협력 모델 및 이슈
- 발표 :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대재해 리스크는 시장의 자율적인 보험 수요·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다양한 공사협력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국내 대재해리스크 보장의 현황 및 공사협력 모델 운영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안정적 재난보험 제공을 위한 정책 및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산업 디지털 전환과 운영리스크 이슈

행사명 : 제21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10. 1(금) 14:00~15:30, ZOOM 보험연구원(화상 세미나)
- 주제 : 보험산업 디지털 전환과 운영리스크 이슈
- 발표 : 정광민 (포스텍 교수)

주요 내용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리스크 발생을 야기한다. 이에 보험산업의 디지털 리스크, 특히 운영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고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모집시장 현황과 이슈 (I)

행사명 : 제22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11. 12(금) 14:00~16: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보험모집시장 현황과 이슈
- 발표 :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최근 제판분리,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등으로 보험회사들은 채널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널운영은 보험회사의 평판 및 장기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채널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보험모집시장 현황과 이슈 (II)

행사명 : 제23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11. 26(금)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보험모집시장 현황과 이슈: GA 채널을 중심으로
- 발표 :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최근 보험산업에서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선별해 판매할 수 있는 법인대리점(GA)이 주력 판매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GA 채널의 급성장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GA채널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Chapter 03

포럼

- 기업 사이버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
- 보험계약 관련 예금자보호제도 이슈와 과제 -
- IFRS17 도입에 따른 계리제도 개선방안 -
- IFRS17 최근 동향과 이슈사항 -
- GA 자회사 설립 관련 법적 쟁점 -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기업 사이버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행사명 : 제32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10. 20(수) 15:00~16:00, ZOOM 보험연구원(화상 세미나)
- 주제 : 기업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과 과제
- 발표 : 최용민 (한화손해보험 상무)
- 토론 : 김도균 (손해보험협회 팀장),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으로 사이버리스크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외 사이버보험시장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험계약 관련 예금자보호제도 이슈와 과제

행사명 : 제33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12. 16(목) 15:00~16: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보험계약 관련 예금자보호제도 이슈와 과제
- 발표 :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 :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원선희 (예금보험공사 팀장),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주요국 운영 사례를 통해 국내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IFRS17 도입에 따른 계리제도 개선방안

행사명 : 2021년 제1회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10. 13(수) 10:00~12: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IFRS17 도입에 따른 계리제도 개선방안
- 발표 :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권기순 (범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변인철 (삼성생명 파트장), 양희은 (교보생명 팀장)

주요 내용

현행 원가방식 책임준비금에 기반한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 등 계리제도에서 IFRS17 도입에 따른 이슈사항을 논의하고 해외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IFRS17 최근 동향과 이슈사항

행사명 : 2021년 제2회 금융정책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11. 24(수) 10:00~11: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IFRS17 최근 동향과 이슈사항
- 발표 :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
- 토론 :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오성균 (미래에셋생명 부장), 장성근 (메리츠화재 파트장)

주요 내용

IFRS17의 2023년 시행을 앞두고 보험회사 준비상황 등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재무 영향에 따른 주주배당가능이익, 법인세 등 이슈사항을 논의한다.

GA 자회사 설립 관련 법적 쟁점

행사명 : 제5회 보험법포럼 | 주관행사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21. 4. 28(수) 16:00~17: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주제 : GA 자회사 설립 관련 법적 쟁점
- 발표 : 최규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토론 :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보험회사가 자회사 GA를 설립함에 있어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영업양도 이슈, 자회사 부당지원 이슈, HR 이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Chapter 0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
- 작업반/회의 참여 -
- 위원회/포럼/패널/자문 참여 -
- 주요 기관과의 공동연구 -
- 언론기고 -
-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연간 4회(2월, 5월, 8월, 11월) 발간되며,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 한상용 연구위원이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2021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융연구 제32권 제1호 (2021년 2월)

제목	저자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의 활용과 법적 문제	이창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	최경진, 전희주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신종자본증권 발행	류두진, 유진영
공적연금 수령이 건강 행태에 미치는 영향	김대환, 강중철

보험금융연구 제32권 제2호 (2021년 5월)

제목	저자
소유-지배 괴리도, 외부 경영통제수단과 사회적 책임 활동	강상구, 변희섭
부분적 청구경력 고지 간소화에 따른 건강보험 요율 차등화에 관한 연구	심현우, 임형기, 최양호
재보험 출재요인의 장단기 영향 분석	송윤아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가 저소득층 금융투자에 미친 영향	김영민, 정원석
부채의 유입과 유출을 이용한 가계부채 변화요인과 영향 연구	유경원, 이상호, 황진태

보험금융연구 제32권 제3호 (2021년 8월)

제목	저자
보험료 납입에 대한 동적 계약자행동	심현우, 박성순, 최양호
동학개미운동에 대한 이론경제학적 분석	정한나, 김상기
심리변수가 손해보험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세완, 구지현, 임소연, 김영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확대 정책의 거시경제효과	이정택, 임태준
보험회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통한 이익조정	최원, 강병민

보험금융연구 제32권 제4호 (2021년 11월)

제목	저자
공적연금제도 종류별 형평성 분석과 연금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김대환, 최경진, 손성동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와 사기죄의 성부	이정원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Credit Ratings	김학순, 강형철, 변희섭
B2B 산업과 B2C 산업 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주가급락 위험에 관한 연구	최금화, 강상구

2. 작업반/회의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 업계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작업반을 비롯한 각종 작업반 활동, 자료 제공,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이고 경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작업반/회의

작업반·회의 명	주최
보험모집채널 선진화	금융위원회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금융위원회
보험조사 협의회 실무자회의(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TF)	금융위원회
설명업무 가이드라인 상시협의체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금융위원회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 보험상품 활성화 TF	금융위원회
혁신보험상품 허용 관련 제도개선 TF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개편 TF	금융위원회
외화보험 리스크 점검 실무 TF	금융위원회
경쟁도평가위원회	금융위원회
감염병리스크 재난보험 도입 로드맵 구상 TF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관련 TF	금융위원회
금융권 불합리한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실무협의	금융위원회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이슈 TF	금융위원회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개선 검토 TF	금융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회의	금융위원회
녹색금융 추진 TF	금융위원회
보험회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금융위원회
사회적 재난에 관한 소상공인 중측적 피해지원 TF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중측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TF	기획재정부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관련 TF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기본계획 자문	국토교통부
할인율 운영방안 마련 TF	금융감독원
ESG투자촉진 지급여력제도상 투자위험 계수 검토 TF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개선	손해보험협회
IFRS17 정착지원 TF	한국회계기준원
중소기업 기술보험 도입방안 TF	중소벤처기업부

3. 위원회/포럼/패널/자문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업권 리스크평가 전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포럼, 패널, 자문 등에 참여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정책(감독)기관 위원회

위원회 명	주최
보험업권 리스크평가 전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보험조사협의회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판매제한, 금지명령 자문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금융위원회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	보건복지부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채권정리위원회	국토교통부
보험자문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타 기관 위원회

위원회 명	주최
리스크관리위원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분쟁조정위원회	전문건설공제
위험관리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녹색금융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	한국생산기술원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보험업권 리스크평가 전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요율제 자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특허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경제적 가정 자문위원회	보험개발원

포럼/패널/자문

포럼·패널·자문 명	주최
자율주행자동차 미래포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기본 계획 자문	국토교통부
제12기 KDI 경제전문가 패널	KDI
리스크자문단	한국주택금융공사

4. 주요 기관과의 공동 연구

외부 연구자원 활용과 국내외 현안분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험개발원, 외부 교수, 건강보험연구원 등과 4건의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공동연구

주제	공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보험개발원
공·사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효율화 연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연구	이민환 교수, 한재준 교수
202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영향 분석	건강보험연구원

5. 언론기고

2021년 1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2021년 코로나 위기속 보험산업 전망	한국보험신문	최 원
발등의 불, 기후위기	아시아경제	이승준
보험,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헤럴드경제	원 장
지금이 연금개혁 할 때다	서울경제	원 장
보험혁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서울경제	원 장
혁신적 보험상품은 실패했다	서울경제	원 장
전기차 시대 '車 부품산업'...인증대체부품 시장서 새 기회 찾아	아주경제	기승도
'제판 분리'에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	서울경제	원 장

2021년 2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보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자	서울경제	원 장
밀레니얼세대의 은퇴준비	아시아경제	변혜원
의료현장서 실손보험 사라질라	서울경제	원 장
AI 리스크와 보험	서울경제	원 장
퇴직연금디폴트옵션과 고려 사항	신아일보	정원석
보험감독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	서울경제	원 장
우물 안 개구리, 한국 보험회사	매일경제	원 장
암호화폐 논란과 관련한 해외 흐름	머니투데이	윤성훈
나무만 보고 숲은 놓치는 보험산업	매일경제	원 장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위험 관리를 위한 제언	한국보험신문	한상용

2021년 3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보험산업 혁신은 IFRS17로 부터	아시아경제	노건엽
베이비부머 고령화, 그 다음은?	중앙일보	원 장
보험회사 대체투자와 그린뉴딜	아주경제	박희우
자동차 보험,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머니투데이	전용식
하반기 보험시장 전망	보험신보	최 원

2021년 4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보험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	매일경제	원 장
'ESG 시대'에 보험사의 역할	서울파이낸스	변혜원
배달 라이더의 안전, 보험가입과 사고예방 모두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김규동
재보험산업 '특정 위험 전문' 히든챔피언이 필요하다	아주경제	임 준
마이데이터 시대, 혁신적 '내 손안에 금융비서'를 기대하며	보험신보	손재희

6.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선진 보험·금융 시장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금융 및 보험산업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각종 금융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된 사례가 대다수이다.

III

2022년
주요 연구계획

1

본업 역량 강화

Level 4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연구: 주요국 제도 비교

황현아(연구위원) | 보고서

자율주행차의 도입 및 확산으로 자동차보험에도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 및 보급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주요국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레벨4 자율주행차 도입 관련 제도변화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 저·무해지 상품 사례 중심

김규동(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보험료 산출 시 해지율을 반영한 보험상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례 조사와 상품 분석 등을 통해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보험회사와 소비자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근로자 소득상실위험 보장과 보험의 역할

정성희(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근로자 백신 휴가·수당 도입 등을 계기로 국내에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자의 상실소득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현행 사회보장 제도와 민영보험과의 합리적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1

본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 사업연속성계획(BCP) 중심

한상용(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왔다. 해외 주요국들은 중소기업의 재해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해 왔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의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및 보험 상품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IFRS17 도입과 보험회사 가치 경영

노건엽(연구위원) | 보고서

IFRS17 도입으로 인해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수익인식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보험회사 임직원 성과평가, 자본 및 손익 변화, 자산운용, 상품전략 등 전반적인 영향을 검토하여 가치 경영으로 전환을 제시한다.

경쟁환경 변화와 보험상품 대응방안

노건엽(연구위원) | 보고서

저성장·저금리로 인해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절실하나 감독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모색한다.

2

시장 혁신

보험시장의 미래: 디지털 환경과 MZ세대를 중심으로

황인창(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보험시장을 둘러싼 기술적, 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경제가 급속히 진전되고, 새로운 소비계층인 MZ세대가 사회 전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보험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험시장의 3~5년 후 미래 모습을 전망하고자 한다.

디지털 보험회사 사업모델 연구

손재희(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와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상품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한 디지털 보험회사의 설립 및 운영 전략 수립이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디지털 보험회사 사례 조사와 사업모델 유형화 분석을 통해 디지털 보험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략 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디지털 치료제 현황과 전망

손재희(연구위원) | 보고서

건강관리 니즈 증가 및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해와 활용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제도적 이슈 점검 등을 통해 국내 시장성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시장 혁신

해외 혁신적 보험서비스 현황 분석

황인창(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 디지털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보험산업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사업모형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인슈어테크 현황을 분석하여 혁신적 보험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박희우(연구위원) | 보고서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이종 업종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제 활용 실적은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가명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여 보험산업을 비롯한 데이터 결합 활성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보험회사의 이종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산업의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임준(연구위원) | 보고서

IFRS17 및 K-ICS 도입,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인해 보험산업의 사업구조 개편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은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M&A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부 사업만 분리해서 정리하는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시장 혁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중복 보장 및 불일치 개선 연구

정성희(연구위원) | 보고서

국민 의료비의 지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 보험에서 불필요한 중복보장 해소와 합리적인 진료수가 적용을 통한 사회보험의 재정부담 완화 및 민영보험의 역할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국민 의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역할 정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연구

양승현(연구위원) | 보고서

기존에 보험업법이 관장하던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법에 산재하게 되면서 해석상 불명확성으로 인한 적용상 문제점 내지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이에 보험회사의 실효적 내부통제체제 마련 및 운영을 위해 각 법률상 요구되는 내용적·조직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백영화(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의 운영 및 적용에 있어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최근에는 유권해석 신청 사례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원과 감독당국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분석 및 정리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겠다.

3

소비자 신뢰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보험금 청구(설문조사 분석)

변혜원(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소비자 행태조사」는 소비자의 위험 인식·관리, 보험이해도, 보험상품 선택·가입·유지·갱신·보험금청구 행태 중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데, 동 연구는 소비자실험을 통해 보험금지급 서비스(보상서비스) 과정 중 소비자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보험 이해도(사전 연구)

변혜원(연구위원)·김동겸(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소비자 행태조사」는 소비자의 위험 인식·관리, 보험이해도, 보험상품 선택·가입·유지·갱신·보험금청구 행태 중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데, 동 연구는 소비자가 보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소비자의 보험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실험분석을 위한 사전 연구와 실험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인구 고령화가 개인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형을 활용한 정량화

김세중(연구위원) | 보고서

출산율, 사망률 하락으로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보험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으나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를 구조모형화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수요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3

소비자 신뢰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연구

김동경(연구위원) | 보고서

보험회사는 시장포화로 신계약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플랫폼기업 등장에 따른 고객 이탈로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손익관리,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마케팅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유지율 관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측면에서 유지율 결정요인 평가 및 관리·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분쟁 발생 시 약관해석기준에 관한 연구: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 | 보고서

약관해석에 대한 분쟁이 보험분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약관의 명확화 및 이해도 제고 등 사전적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쟁 해결을 위한 약관해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판례 등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작성자불이익원칙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보험 상해 등급 개선 연구

전용식(연구위원) | 보고서

자동차보험 상해 등급은 상해 내용의 부재, 적용의 복잡성, 상해 등급별 보험금 한도의 형평성 및 일관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 민원도 높아지고 있고 도덕적 해이 유인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해 등급의 일관성, 보험금 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4 ESG 경영

보험회사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박희우(연구위원) | 보고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보험회사도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ESG 투자 현황과 전략 및 기준을 비롯하여 ESG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인 지급여력제도 등에 대한 조사 및 정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외 보험회사의 ESG 투자 현황을 조사하여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ESG 평가 지표 연구

이승준(연구위원) | 보고서

기후위기 심화로 ESG 경영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며 ESG 평가지표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ESG 평가지표 등을 조사하고, 보험회사 ESG 경영 관점에서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 ESG 경영에 적절한 지표 및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따른 제재리스크 대응방안

송윤아(연구위원) | 보고서

세계적으로 소비자·근로자·개인정보·환경·공정경쟁 보호 기조와 함께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제재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벌금 및 과징금에 대한 보험제공 가능 여부 및 기저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2021년
일반현황

1. 경영비전

본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세계화·융합화·겸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2. 연혁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5대 안철경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외에도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자	주요 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보험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2013년 4월	3대 강호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6년 4월	4대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9년 4월	5대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취임
2021년 12월	제16회 대산보험대상 수상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3.1 조직도



3.2 총회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2개사, 손해보험회사 17개사가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전 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2021년에는 2021년 임시총회를 시작으로 총 4회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3.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대표 5인)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에는 2021년 2월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3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3.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2019년부터는 연구자문위원회를 연구사업계획과 운영을 자문하는 ‘연구분과’와 보험산업 및 연구원 발전방향을 자문하는 ‘발전분과’로 나누어 구성하고 2021년 10월에 연구분과회의, 11월에 발전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자문위원회 연구분과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양기진	전북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종선	글로벌금융판매 대표	유호석	삼성생명 부사장
남덕우	한양대학교 교수	이근창	영남대학교 교수
성대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사장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성영애	인천대학교 교수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연구자문위원회 발전분과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최남수	서정대학교 교수	김지한	DRB동일(주) 상임감사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전문	정학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이젠마	경희대학교 교수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서태종	금융연수원 원장	김영대	법무법인(유한) 클래스 대표변호사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		

4. 임직원 현황

(2021. 12월 말 현재)

원장	연구직			행정원	초빙연구위원	임시직원	합계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조원				
1	28	22	4	9	-	8	72

2021 연차보고서

발 행 인 안철경
편집위원장 김해식
편 집 위 원 장동식
제 작 경성문화사 (786-2999)
발 행 일 2022. 1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